

참여정부의

Participatory Government Defense Policy 2003

국방정책

참여정부의
Participatory Government Defense Policy 2003
국방정책





- ◆ 태극문양은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우리 군의 모습을,
그 위의 섬광은 국방이 추구하는 목표를,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첨단 정보·기술군과
선진화된 국방의 모습을 나타내며,
Enter키와 손모양의 아이콘은
“열린 국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임

참여정부의

Participatory Government Defense Policy 2003

국방정책

발 간 시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안고 ‘참여정부’가 희망찬 향해의 닳을 올렸습니다. 벌써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열망이 하나의 흐름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정세를 보면, 21세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공존과 공영의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인류의 여망과는 달리 9·11 테러사태로부터 아프간전쟁을 거쳐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세는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토·자원·환경·경제문제 등 잠재적 분쟁요인이 내재된 가운데, 각국은 국익 및 영향력 확대 경쟁과 첨단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어 유동적인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불확실한 안

보환경 속에서 국가이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군의 전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자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과 태세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및 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은 물론,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은 참여정부 기간 중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국방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정책을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3. 7. 11.



국 방 부 장 관 조 영 길

1 가

1	19
1.	19
2.	20
2	22
1.	22
2.	23

2 ‘ ’

1	‘ ’	27
1.	‘ ’	27
2.	‘ ’	28
3.	‘ ’	29
2	30
1.	30
2.	31

3

1	39
1.	39
2.	40
3.	41

2	42
1.	42
2.	43
3.	44
4.	45
3	46
1.	46
2.	47
4	49
1.	49
2.	51
3.	55

4

1	59
1.	59
2.	60
3.	60
2	62
1.	62
2.	62
3.	63
4.	65
5.	65

3	66
1.	66
2.	67
3.	67
4	69
1.	69
2.	72
3.	78
4.	80
5	86
1.	86
2.	87
3.	89

5

1	93
1.	93
2.	94
2	96
1.	96
2.	96
3	98
1.	98
2.	99
3.	101

4	103
1.	103
2.	103
5	106
1.	106
2.	「 」	107
3.	·	108
4.	109

6

1	115
2	117
1.	117
2.	117
3	119

7

1	2003	123
2	124	
1.	124	
2.	125	
3	128	
1.	128	
2.	·	129

3.	129
4.	가	130
4	131

8

1	135
1.	135
2.	136
3.	139
2	143
1. ‘ ’	143
2.	가	149
3. 6·25 50	150

1. 2002	157
2.	158
3.	159
4. 	160
5. 	161
6. 34 SCM	166
7.	168
8. .	/ 가	172

9.	(ARF) 가	173
10.		179
11.		180
12.		182
13.		189
14.	/	201
15.		209
16. 2003		210
17.		211
18.		212
19.		213
20.		214
21.		215
22. 2002		217
23. 2002		218
24.		219
25.		220
26. 2003		226
27.		227
28.		228
29.	가	229
30.		230
31.	(2000)	235

【2-1】		29
【2-2】		30
【2-3】		34
【3-1】		42
【3-2】	/	42
【3-3】		43
【3-4】	/	43
【3-5】		44
【3-6】	/	44
【3-7】		45
【3-8】		46
【4-1】		62
【4-2】		72
【4-3】	PKO	73
【4-4】		74
【5-1】		98
【5-2】		99
【5-3】		100
【5-4】		101
【5-5】		106
【5-6】	3	107
【5-7】		108
【5-8】 2003		109
【5-9】 2003		110
【7-1】 2002	2003	123
【7-2】 2003		123
【7-3】		124
【7-4】		126
【7-5】		127
【7-6】		130

【8-1】	/	135
【8-2】	/	135
【8-3】		136
【8-4】		137
【8-5】	()	139
【8-6】	2002	140
【8-7】	5	141
【8-8】	5	141
【8-9】		143
【8-10】		144
【8-11】		145
【8-12】		146
【8-13】	2002	148

ACMI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G	Australia Group	
AOE	Fast Combat Support Ship	
ARF	Asean Regional Forum	
ARS	Audio Response System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BIDS	Biological Integrated Detection System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 , , , ,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T	Computer Based Training	()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FA	Combined Field Army	.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CPX	Command Post Exercise	
CRC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CRAC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
CT	Computer Tomography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DD	Destroyer	

DMZ	Demilitarized zone	
DPAMIS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	
EC	Electronic Commerce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	
ERW	Explosive Remnants of War	
EU	European Union	
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FF	Frigate	
FMP	Force Module Package	
FMS	Foreign Military Sales	()
FTX	Field Training Exercise	()
GDP	Gross Domestic Product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OP	General Outpost	
HEU	High Explosive Uranium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G-CBMs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PB	Intelligence Preparation of the Battle	
IT	Information Technology	
IW	Information Warfare	
JSA	Joint Security Area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DX	Korean Destroyer Experimental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NTDS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LAN	Local Area Network	
LNWFZ-NE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LPE	Long Range Precision Engagement	
LPP	Land Partnership Plan	(·)

LST	Landing Ship Tank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
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
MD	Missile Defense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MINURSO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LRS	Multiple-Launch Rocket System	/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OG	Military Observer Group	
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NATO	North-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LL	Northern Limit Line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가
NVG	Night Vision Goggle	
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OCI	Olympic Council of Asia	
OEF	Operation of Enduring Freedom	
OPCW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PCC	Patrol Combat Corvette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PGMs	Precision Guided Munitions	
PKF	Peace-Keeping Forces	
PKO	Peace-Keeping Operations	
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DL	Rapid Deployment Level	
RTDS	Real Time Display System	
SCC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SSM	Submarine Midget	
START-I,II,II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I,II,III	(.) 1,2,3
TACC	Theater Air Control Center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 .) 3
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TF	Task Forc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	
UFL	Ulchi-Focus Lens	()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 Pakistan	.
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WA	Wassenaar Arrangement	()
WAN	Wide Area Network	
WEN	Western European Union	()
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ZC	Zangger Committee	()

제1장 안보정세 평가

제1절 세계 및 동북아 정세

제2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제1절 세계 및 동북아 정세

1. 세계정세

오늘날의 세계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공존과 공영의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인류의 여망과는 달리 9·11 테러사태로부터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 중심의 안보개념이 경제·외교·사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이라크전, 중동·체첸사태 등에서 보듯이 군사력은 여전히 국익보호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냉전시 잠재되어 있던 영토·종교·자원·민족갈등 등 다양한 분쟁요인의 표출로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증대하였으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라 국제테러, 환경오염, 자연재난, 해적행위, 불법난민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화되었다. 최근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등 신종 전염병도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어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03년 3월 20일 미·영 연합군에 의해 개시된 이라크전은 유엔의 반대 및 범세계적인 반전·반미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제거를 위해 최초로 적용된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으로서 미국의 월등한 군사력 우위를 재확인함은 물론, 향후 미국 주도의 일초다강(一超多强)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라크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미국은 향후, 정치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을 유도하고, 경제적으로는 원유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중동 및 세계질서를 통제하는 동시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보유·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군비축소 촉구, 국지전 개입, 분쟁 조정 등 국제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위상에 큰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더불어 전쟁의 패러다임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전은 다수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영토 확보, 대량살상 중심의 전쟁양상 대신에 장거리 정밀타격무기(PGM) 등 첨단무기체계에 의한 정보마비 및 중심(重心) 타격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향후 미래전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정보·기술 중심의 첨단 군사력 건설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동북아 정세

세계의 전략적 중심 축으로 부상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다양한 분쟁요인의 잠재와 국가간 이해 관계의 상충 및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인한 안보정세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문제, 일·중간 센카쿠(중국명 釣魚島) 열도 문제 등 영유권 문제와 함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 환경오염 문제, 대만문제,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이 산재하여 역내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의 안정 유지 및 균형자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 및 정보·항공·우주전력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진배치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환경 변화와 미군의 군사변혁(Transformation)에 따른 능력 신장 등을 고려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함께 해외주둔 미군사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사력에 대한 일정부분의 변화 및 조정이 예상된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 체제하에서 2003년 6월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는 등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적극적인 안보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확보하고, 해양통제권 및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참여를 통해 국력에 상응한 국제적 역

할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에 상응한 전력 증강 및 군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 미사일 및 해·공군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 위협론’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미국의 다자적 접근을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차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

러시아는 국익중심의 실용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군사력 현대화 및 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역할 강화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회복을 위해 군 구조 개편, 병력감축, 부대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정예화, 기동화, 경량화 및 원거리 투사능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제2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 북한 정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가운데, 선군정치에 의한 군부중심의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민일치 사상을 강조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대미관계 악화에 따라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내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이미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체제 유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1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하달된 ‘경제관리 개선 지침’과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동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안’ 등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체제수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북한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나, 북한체제가 갖는 구조적 모순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 동결 해제’ 발표 이후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한편,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등 체제보장을 위한 대미 협상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북·미·중 3자 회담에 호응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과는 2002년 9월 17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수교회담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핵 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러와는 정치·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전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며, 당국간 대화 및 민간급 교류를 지속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를 진행하여 실리위주의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등 대남 유화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화전략을 폐기하지 않은 채,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종래의 통일전선전략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의 군사위협

북한은 지상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7만 여명의 상비전력과 교도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총 748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없이 대남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과 초보적인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라늄 농축에 사용 가능한 장비·물자 등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화학무기 중 생물무기는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여 종의 균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무기는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등 10여 종 이상의 유독성 작용제를 6개 저장시설에 2,500~5,000톤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300~500km인 SCUD-B/C와 최대사거리 1,300km의 노동1호 미사일부대를 작전 배치한 후, 1998년 8월 최대사거리 2,000km급인 대포동1호를 인공위성운반체로 사용한 바 있으며, 현재 최대사거리 6,000km급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최근 노동 미사일 1개 대대를 추가로 작전 배치하여 장거리 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170mm와 240mm 장사정포를 전진배치하여 남한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천마호 전차와 상어급 소형 잠수함을 생산하는 등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지대함유도탄 시험발사 및 전국규모의 방공훈련 등 방어위주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심리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3월부터는 미국의 대이라크전과 관련하여 전투준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의 개전 및 우리 정부의 파병조치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현재까지 계속한 바 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

특이 동향으로 북한은 지난 2월 20일에 MIG-19기 1대로 연평도 상공을 침범하고, 2월 24일에는 동해에서 지대함 유도탄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3월 2일에는 MIG-23/29 전투기를 동원하여 동해상에서 정찰 중인 미국의 RC-135 정찰기에 대해 근접 위협비행을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서해 접적해역에서는 꽃게잡이 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북한어선 총 37척이 10회에 걸쳐 NLL을 침범함에 따라 아 고속정이 6월 1일과 6월 3일에 2차례 경고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서해함대사령부의 조업구역 북상조치와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NLL침범이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행태를 고려시 향후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의 의도적 또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북한군의 능력과 태세는 변하지 않은 가운데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다.

제2장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과 국방정책

제1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제2절 국방정책 목표와 방향

제1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배경 및 의미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6·15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정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 왔다. 이에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동북아 번영의 중심축으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과제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토대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진전을 병행 추구하는 등 평화와 번영의 균형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추구를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의 4대 추진원칙 아래,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북한 핵 문제를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적으로는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며, 미북·일북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룬다는 추진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 '평화번영정책'과 자주국방

평화번영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우선 대북억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국방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하는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주한미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으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도 그러한 심리가 형성되어, 안보·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안보를 확고하게 지켜내고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동맹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자주적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미동맹과 대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 군사력에 있어 대북 열세를 극복하고, 군 운영체제를 효율화하며, 미래 동맹의 변화·발전에 대비하여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중요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이외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자주국방력에 기반하여 한·미동맹과 대주변국 협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한국방위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지역 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해 나가야 한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요컨대 자주국방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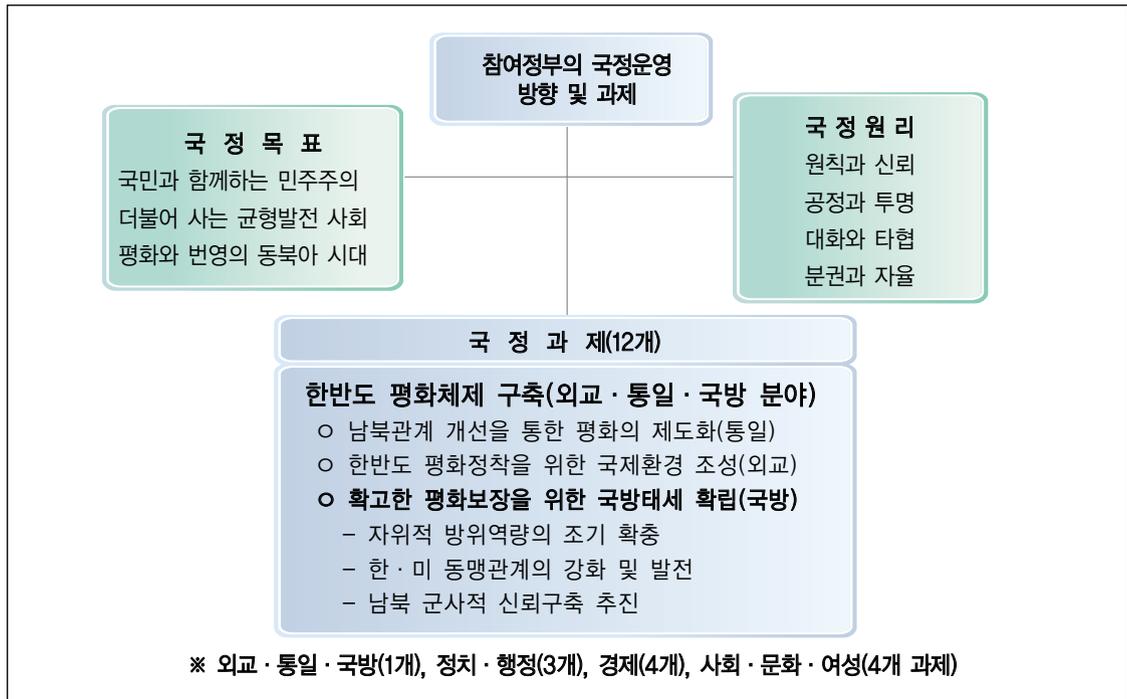
자주국방은 다음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대북억제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고, 둘째, 국방개혁으로 군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셋째, 이를 기반으로 연합지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주국방은 물질적 요소도 갖추어야 하지만 정신전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군은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자주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3. '평화번영정책'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열어 나간다는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통일·국방분야의 국정과제로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를,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을 각각 소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핵심인 자주국방개념에 입각하여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① 자위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②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및 발전 ③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을 국방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추진방향에 부합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국방 전 분야에 대한 개혁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분야별 국방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표 2-1】 참여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과제



제2절 국방정책 목표와 방향

1.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중점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의지와 국방지침을 구현하고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자주적 선진국방’이란 자위적 방위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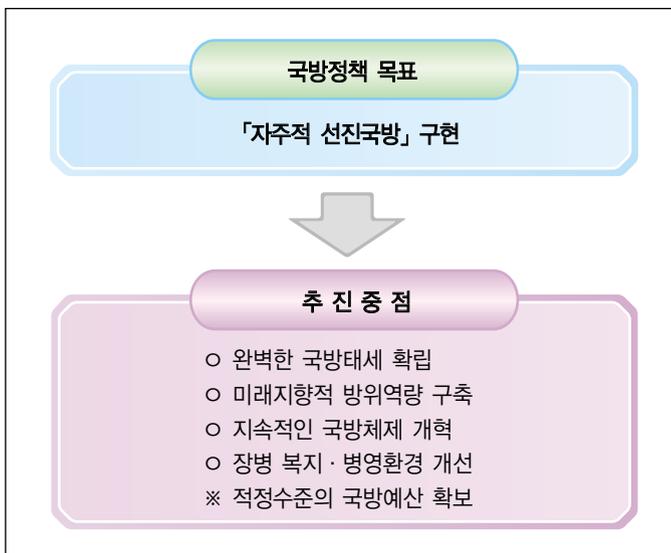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과 국방태세를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 동맹관계와 대외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닌 선진적 운영체제를 갖춘 국방의 총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물론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중점을 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③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④ 장병 복지·병영환경 개선에 두고, 군의 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도표 2-2】 참여정부 국방정책 목표 및 추진중점



2. 국방정책 추진방향

가 .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 국지도발과 테러 및 비군사 도발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보강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전쟁억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한·미 연합감시 및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위기 관리체제를 보완하여 한·미 연합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합참을 중심으로 한 상급제대에서는 현존 및 미래 불특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동전력 운용개념과 전력구조 발전계획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교리, 전력구조 및 군사력 소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군은 대비태세 유지차원의 확고한 안보관을 정립하기 위해 지휘관 스스로 이를 신념화하고 솔선수범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력 건설은 단기간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10~20여 년의 선행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안보에 있어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한·미 동맹관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유지가 매우 필요하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현존 및 미래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를 목표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선, 현존 위협 대응능력 완비,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전력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주적 선진국방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여 정보 지식 기반의 국방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장병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군은 '한·미 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한·미동맹이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장차 한·미동맹이 지향할 공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간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1세기를 지향하는 동맹의 청사진 구상과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발전적 동맹관계의 모색은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인 한·미 동맹 발전방향은,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 안보환경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과 한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동맹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미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 즉 기지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미2사단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미측과 협의하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수정소요가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보완하며, 용산 기지는 조기에 이전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합지휘체제의 발전은 그 동안 유지되어 온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근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안보사안으로, 한·미 상호간 오해나 마찰이 없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완비 시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국가목표 및 과제로 제시하여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손상됨이 없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군사협력'은 목표 지향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추진하되,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동반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러시아와는 군사교류와 방산협력 다양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 관련 한·미·일 공조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방산수출 다변화 등 실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군비통제 및 다자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외 파병 활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해외파병의 경우 파병지역의 분쟁 또는 전쟁상황, 국제사회의 지지도, 국민여론, 파병성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다.

현재 해외파병 인원은 유엔 PKO 및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포함하여 세계 7개 지역 1,473명으로, 이들은 세계평화 유지와 대테러 국제연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군의 위상 고양과 국익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해외파병과 관련한 정책발전을 위해 국제평화지원센터 설립과 유엔 상비체제 적극 참여, 관련 규정 보완 및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필수적이므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군은 국가방위의 주력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기 평가와 개혁을 통하여 군사적 대응태세와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은 확고한 목표와 방향의식을 정립할 수 있으며, 조직의 활력과 발전의 동력(動力)을 유지할 수 있다.

국방개혁이란 ‘군 전투력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방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군의 임무수행태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국방조직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과업인 것이다.

우리 군은 지난 50여 년간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오늘의 정예 강군으로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군이 이룩한 성장과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지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군 운영의 비효율적인 면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정신개혁」,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표 2-3】 국방개혁 중점과제

- | | |
|------------------|-------------|
| ① 인사개혁 | ② 국방조직 정비 |
| ③ 병역 및 예비군 제도 개선 | ④ 군 사법제도 개선 |
| ⑤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제고 | |

첫째, ‘인사개혁’은 군 인력의 계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사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정립하고, 적정 진출률 보장을 위한 군별 계급구조의 재설정과 적체인력의 단계적 감소를 추진하며, 진급 적기 경과자에 대한 군 복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방조직 정비’는 미래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예군사력 육성에 적합한 조직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국방부·합참·각군본부의 기능을 보강 재정립함으로써 국방조직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셋째, ‘병역 및 예비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부담을 해소하고 예비전력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병행 단축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병역자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예비군 제도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따른 예비전력 수요를 고려하여 2003년 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군 사법제도 개선’은 지휘권과 장병 권익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국방부 소속의 「순회 군판사단」을 운용하고, 지휘관 확인 조치권을 제한하며,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다섯째,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증강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개방형 회의체’로 개선하고,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도에 변경되고 추진이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는 소수 인원이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개혁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 전원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하는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복지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 군도 그 동안 가용한 자원 범위 내에서 장병의 복지와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력신장 및 사회발전 추세와 장병의 기대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다. 장병의 사기·복지는 전투력의 기초로 유사시 전력발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병 모두가 오직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군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장병복지와 병영환경 개선을 국방정책 추진중점의 하나로 선정하여 참여정부 기간 중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장병복지 개선’은 노후된 병영시설과 간부숙소를 조기에 개선하고, 병 봉급은 기본육구 충족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각 군별 복지 수혜의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즉, 잘못된 군대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근무기풍을 조성하며, 간부의 직업윤리와 군인관을 재정립하여 선진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인 ‘제대군인 취업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전역 후 안정적 생활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직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업보도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국방정책 목표를 정립하고 추진 중점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군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과 장병의 사기 복지 개선, 실질적 교육훈련을 통한 전투준비태세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이자,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국가 생존과 국익수호를 위한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방비 배분 수준은 국가 재정운영 여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3년도 기준) 정도로서 최근 수년동안 지속된 국방비의 하향 배분 추세로 인해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전력투자는 물론 운영 유지에도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방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3.2~3.5%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내부적으로 국방기획관리 전반에 걸친 과학적 분석 평가와 장병들의 의식 개선을 통해 국방비의 경제적 운용과 절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제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제2절 우리 군의 전력 운용

제3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

제1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력 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핵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군사적 위협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확고한 한·미 연합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 강화

북한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8년 동해, 강화도, 여수 반잠수정 침투 및 목호 무장간첩 침투, 1999년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 등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적화전락에 변화가 없는 한 대남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문제 협상간 국면전환을 위한 군사적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매년 꽃게 성어기·녹음기 등 주기성 취약시기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침투·국지도발은 물론 테러·비군사적 도발 등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군사동향 및 침투세력에 대해 24시간 추적감시태세를 강화하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도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동향에 따라 신속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꽃게 성어기에 서북해역에서의 의도적 도발 또는 우발적 충돌에 대비하여 2002



해안철책 경계

년에 새로 정립한 작전지침에 따라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DMZ 및 해·강안 경계태세의 질적 보강과 북한 전투기의 영공침범에 대비한 대응작전체제 보완은 물론, 경의선 및 동해선 공사지역에서의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도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 및 비군사적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한 가운데, 대테러 작전부대의 전문화훈련 및 상시 지원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또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 1~2월에 통합방위 중앙회의 및 지방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개정된 통합방위법, 동법 시행령·지침을 적용, 후방지역 종합훈련인 화랑훈련을 통하여 통합방위작전 시행태세를 향상시키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 안·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내실화

한·미 연합작전태세는 합참·연합사·작전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고히 유지·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는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상 중대사건으로 인해 군의 자산 및 병력 사용이 예견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미간의 연합 위기관리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결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공조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시 동일한 시각에서 일관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위기관리 협의체를 보완하여 위기관리 및 군사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기유형별 대응절차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이를 매분기마다 정기적인 연습과 수시 훈련을 통하여 숙달함으로써 위기조치요원들의 임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국방부장관 연합사 순시

또한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위기조치기구간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소자동화체계의 연동 및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3. 전면전 대비태세 원비

남북관계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완벽한 대공방어

있다. 우선, 북한군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개전 초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북한군의 장사정 포병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안보환경 및 급속히 변화되는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적정 감시활동과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기법을 적용한 연합 및 합동훈련, 각종 전술토의 등을 통하여 작전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유사시 북한군이 기동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사대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과학화 추세에 발 맞추어 합동 C4I체계 및 정보작전 수행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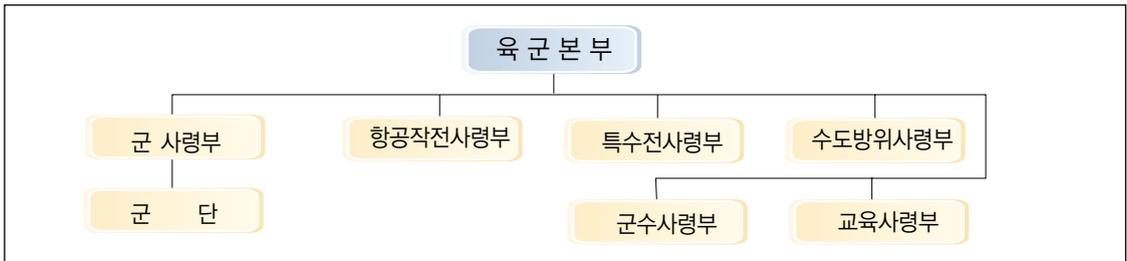
제2절 우리 군의 전력 운용

1. 육군전력

육군은 국가 보위의 주력으로서 평시에는 해·공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0개 군단, 47개 사단 및 19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56만여 명의 병력, 전차 2,400여대, 장갑차 2,300여대, 야포 5,200여문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표 3-1】 육군의 구성



【도표 3-2】 육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병력	전차	장갑차	야포	유도무기	헬기
56만여명	2,400여대	2,300여대	5,200여문	20여기	610여대

※ 야포 : 다련장포 포함, 유도무기 : ATACMS 포함

1군과 3군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수도권을 포함하는 책임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2군은 1·3군 책임지역 이후부터 해안선을 포함한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기동부대에 대한 화력지원과 공중수송 및 정찰임무를 지원

하고, 특수전사령부는 첩보수집과 아군의 화력유도 및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유지 지원 및 도시 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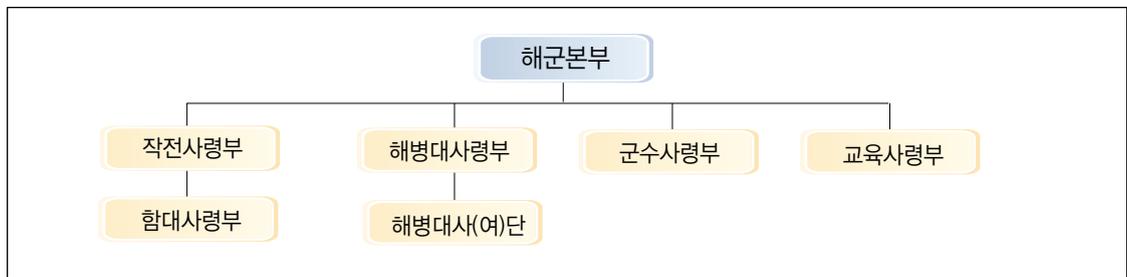
각군 및 군단사령부의 각 사단에는 예하 기동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위하여 자체 포병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포병부대는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화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화포와 표적획득장비 및 사격통제장치 등의 첨단과학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2. 예군전력

해군은 평시 전쟁억제 이외에도 해양에서의 국가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대외정책 지원과 국위선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해양을 통제하여 우리의 해양활동은 보장하되, 적의 해양활동은 거부하고,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며, 적의 측·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군은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전사령부 예하에는 3개 함대, 해병대사령부는 예하에 2개 사단 및 1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6만 7천여명의 병력과 함정 180여척, 항공기 7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표 3-3】 해군의 구성



【도표 3-4】 해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병력	잠수함(정)	전투함(정)	지원함(정)	항공기
6.7만여명	10여척	150여척	20여척	70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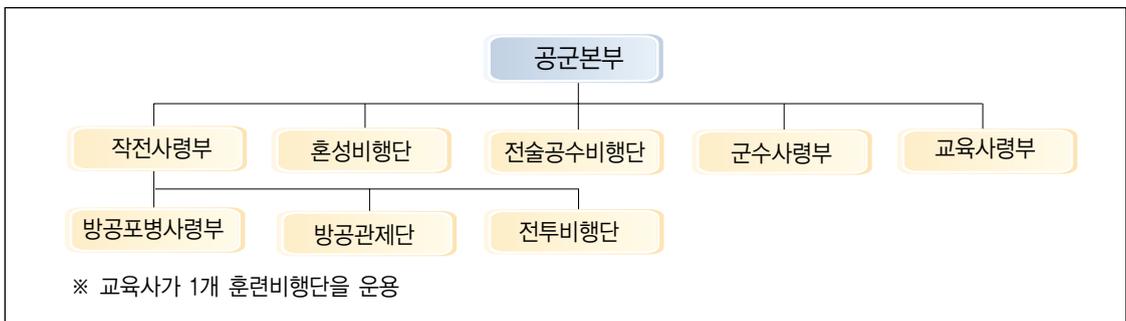
작전사령부는 대잠수함전, 기뢰전, 상륙전, 구조전, 특수전 등 주요 성분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및 항공기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고, 각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정)을 운용하여 책임해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수륙양용차 등 각종 상륙장비와 자체의 화력지원 수단을 보유하여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공군전력

공군은 평시에는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응징보복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지상군과 해군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및 이를 지원하는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고, 공군본부에는 2개 비행단, 작전사 예하에는 방공포병사령부, 방공관제단, 9개 전투비행단이 구성되어 6만 3천여 명의 병력과 KF-16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8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표 3-5】 공군의 구성



【도표 3-6】 공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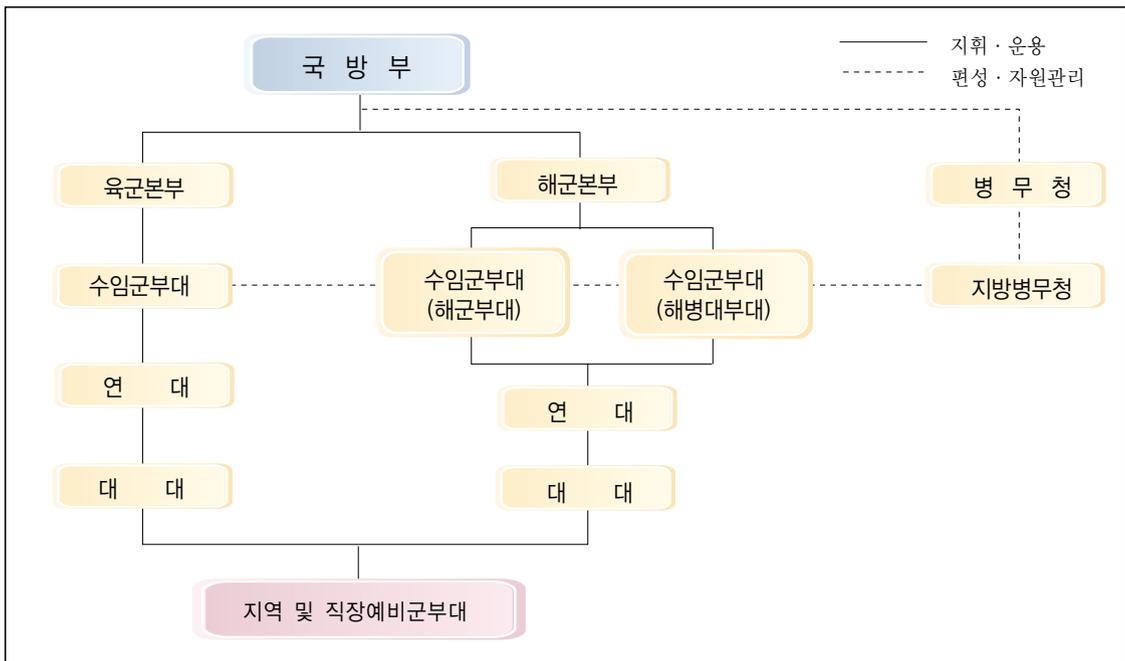
			
병력	전투기 550여대	특수기 70여대	지원기 220여대
6.3만여명	KF/F-16(150여대)	RF-4C(20여대)	수송기(30여대) / 훈련기(160여대) / 헬기(30여대)

항공작전은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의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현재 공군은 정밀폭격 및 중·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및 해상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공·지·해 합동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예비전력

예비군은 1961년에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근거로 하여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그해 4월 1일 창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예비군은 약 304만명으로, 각 지역 및 직장예비군 부대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통하여 예비군을 지휘 운용하고, 편성 및 자원관리는 병무청이 관장하고 있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서 현역과 동일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표 3-7】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제3절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운용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한 이래,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 주한미군

주한 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주한 미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및 주한 미특수전사령부 등이 있으며, 유사시 미 제7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도표 3-8】 주한 미군사령부 조직



주한 미군의 총 병력은 37,000여 명으로써 육군 28,000여 명, 공군 8,700여 명, 해군 해병대 4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8군은 2사단과 2개의 항공여단을 주축으로 140여 대의 신형 M1전차, 170여 대의 브래들리(Bradley) 장갑차를 비롯하여 30여 문의 155밀리 자주곡사포, 30여 문의 다련장로켓과 패트리엇를 포함한 지대공 유도탄, 70여 대의 AH-64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70여 대의 F-16 등 최신예 전투기와 20여 대의 A-10 공격기, U-2기를 비롯한 1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전천후 공격 및 공중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 미해군사 및 해병대사, 특수전사는 평시 사령부를 구성하는 소수 인원과 장비만으로 기간 편성되어 있으나, 전시 또는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시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이 투입된다.

2. 증원전력

미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약 69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한 공·지 입체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전력 2개 군단,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하고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5개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와 적지중심타격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전력 32개 대대와 오키나와 및 미 본토의 2개 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신속억제방안(FDO)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시에 전쟁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급전개항공기,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증원전력의 주축인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은 신속억제방안과 전투력 증강전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In-place)과 상황 발생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전력(Pre-Planned), 그리고 요청시 추가로 전개되는 전력(On-Call)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과 미군은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1994년부터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면서 전개절차 및 수송수단의 운용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합사령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

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우리 군은 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실전적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을 통하여 전시 임무 수행절차와 방법을 숙달함으로써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주요 연습 및 훈련으로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 환태평양 훈련 등 연합연습·훈련과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 압록강 연습, 화랑훈련 등 합동연습·훈련이 있다.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국가 전쟁지도 및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종합지휘소연습(CPX)으로 1954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을지 연습’을 통합하여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간에는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미 연합 위기관리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작전계획 숙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 도하훈련

나.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한·미 연합사 주관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

원, 연합후방지역 조정관(CRAC) 임무수행,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전시증원 연습간에 한측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 사단·함대·비행단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측에서는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 태평양사령부, 미 우주사령부, 미 수송사령부 및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다. 독수리(FE) 연습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연습이며, 2002년부터는 실전적인 연습여건을 보장하고 연습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합전시증원 연습을 통합하여 3월 하순에 실시하고 있다.



독수리연습

라. 환태평양(RIMPAC) 훈련

환태평양 훈련은 1971년부터 미3함대사 주관하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하여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으로서 우리 해군은 1990년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총 7회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에 태평양상의 해상 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분쟁 발생시 공동 대처능력 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환태평양 훈련

마. 압록강 연습

압록강 연습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실시하는 한국군 자체 지휘소연습으로, 전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각 작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5월에 실시한다. 압록강 연습시 합참과 작전사의 지휘부는 연습 실시단으로 연습에 참가하고, 기타부대 및 기관은 대응반과 대행반을 구성하여 자대 지휘소 및 전투모의센타에서 워게임 모델에 의해 연습을 실시한다.

합참은 압록강연습을 통해 작전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와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전투력복원 절차와 전시 지원소요의 산출 및 지원체계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1999년부터는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연동하여 운용함으로써 연습성과를 크게 향상시켰다.

바.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해안과 내륙 축선에서 육·해·공군 합동으로 작전계획의 시행을 위주로 실시하는 대부대 실병력 기동훈련이다.

2001년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합동교전심판 워게임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 또한, 훈련계획 수립시에는 작전계획 전술토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합동작전 수행체제를 확립시키고, 훈련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있다.

2. 각 군의 주요 훈련

육·해·공군은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군 전술을 고려하여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 육군

육군은 평시에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완전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개인훈련과 집체훈련으로 구분하여 부대 유형별, 형태별, 병과별, 기능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훈련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해당 직책에 대

한 주특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집체훈련 중 소부대 전술훈련은 분·소대 팀단위 전투사격과 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계인 마일즈(MILES) 장비를 이용한 쌍방 교전훈련을 통해 실전성 있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대훈련은 야외기동 및 상황조치 훈련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연대급 훈련으로는 제병 협동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흑한기 야외 전술훈련을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중에 실시하고 있다.

사단 야외기동훈련은 군단장 통제하에 사단장 재임기간 중에 통합전투 수행, 화력 운용, 장애물 운용 및 거부, 화생전, 전투근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1주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

군단 및 사단 전투지휘훈련(BCTP)은 해당부대 지휘관 및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통제하에 지휘관 보직 후 1년 이내에 부대지휘절차의 숙달,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의 제고, 전장체험 및 야전 예규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적인 지형과 작전개념에 적합한 ‘창조21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군단 및 사단급의 지휘 및 참모활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제병 협동 및 합동훈련으로는 작전부대별로 대전차공격훈련, 공·지 합동훈련, 공·지·해 합동훈련, 합동 대상륙훈련, 도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훈련으로는 공중강습훈련, 화생방훈련 및 대화력전훈련 등을 한·미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군은 야간훈련, 흑한기훈련, 유격훈련, 화생방훈련, 재난구조훈련 등 전시 상황과 유사한 악조건 하에서의 훈련을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단위부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예하 지휘관에게 과감히 위임하여 자율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책임제 훈련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권역별로 통합훈련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이용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중강습 훈련

나. 해군

해군은 평시에는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전시에는 해상 교통로를 방호하는 동시에 해양 우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대잠전, 대함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및 특수전 등 각종 해군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의 함정은 대잠수함전과 대공전, 전자전 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 전투함정은 적의 대규모 해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전 위주의 입체 종합기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 함정은 상륙 돌격 및 상륙 기습훈련을 통해 상륙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뢰전 함정은 적의 기뢰 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해능력과 기뢰 부설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해안정찰, 기습타격 및 생환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함 부대는 항만봉쇄, 대잠수함전 및 수상세력 감시와 어뢰발사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항공부대는 함정과 협동으로 해상초계 및 대잠훈련과 함께 레이다 탐지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에 대해 대함 미사일공격을 유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입체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1993년부터 연 1회 해군의 전 가용전력과 육·공군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다중위협 상황하에서 복합전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적의 고속상륙세력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수상·수중·항공전력의 입체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해군과의 환태평양 훈련(RIMPAC),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미 연합훈련인 대잠전훈련, 잠수함 대 잠수함훈련, 기뢰탐색훈련, 상륙전훈련, 해상초계훈련 등을 내실화하여 한·미 해군간 연합작전 수행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해상 종합 기동훈련

주변국가와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순항훈련과 훈련 참관단 교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함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와 외국 군함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연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전력의 일부로서 연합 및 단독 상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육·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공군

공군은 전시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도록 평시 모든 훈련은 실제 전장과 전투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어제공, 공격 편대군, 이동표적 공격, 대화력전, 근접항공지원, 항공정찰, 전술공수, 탐색구조훈련 등을 한국공군 단독 또는 한·미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어제공훈련은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하기 위해 적 침투전술을 적용한 가상적기를 운용하여 실제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격편대군훈련은 적지중심작전 능력과 전략목표 공격능력 강화를 위해 전술표적을 대상으로 중·저고도 침투 및 공격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밀공격이 가능한 KF-16 전투기를 이용하여 주·야간 및 전천후 근접항공지원훈련, 합동 대함공격훈련 등을 실시하여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항공정찰훈련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과 전파절차를 숙달하고, 전술공수훈련을 실시하여 부대 전개 및 물자보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야시장비(NVG)를 활용한 야간 탐색구조훈련과 전자전, 화생방전 및 비정규전훈련 등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KF-16전투기 초계비행훈련

3. 장병 정신교육 강화

우리 군은 불확실한 안보상황 하에서 대비태세 유지 차원의 확고한 안보관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해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병정신교육 방향은 먼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의 안보상황을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변함없는 북한의 위협 및 실체를 교육함과 아울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강력한 힘이 바탕이 되어야함을 장병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경제적·군사적 이익 등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확고한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군인윤리에 기초한 건전한 직업관을 정착시켜 행동화하는 참군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기존의 정신교육체계와 제도를 혁신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교육 강화방안을 지속 연구·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정신교육 대상별로 목표달성에 부합되도록 내용체계를 정립하고, 제대별로 상급부대 지원교재와 부대에 설치된 CATV 장비 등을 활용하여 성과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개성을 중시하는 장병들의 감각적인 성향을 고려하여 영상교재 등 시청각 교재의 비중을 늘려 가는 한편, 진중문고 보급량 확대와 전 대대급 단위의 도서관 설립 등 건전한 병영문화의 육성을 통해 장병들의 교양증진과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국방망을 활용한 정신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정신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군 전용 위성TV 방송국 설치와 사이버(Cyber) 원격 정신교육지원 기반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대 쌍방향 기법을 활용한 정보화·과학화 교육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섯째, 정신교육은 전투준비 태세의 일환으로 ‘내 부하 정신교육은 내가 책임진다’는 신념과 의지로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시행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되, 양성 및 보수과정의 학교 교육시부터 지휘관 중심 정신교육의 중요성 및 역할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4장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제1절 전력구조 개선

제2절 군 정보화 추진

제3절 한·미동맹 발전

제4절 대외 군사교류·협력 강화

제5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제1절 전력구조 개선

1. 전쟁원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영토확보와 대량살상을 추구하는 전쟁의 형태가 정보 마비와 중심타격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최근의 이라크 전쟁은 전쟁형태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장공간을 지·해·공의 3차원에서 우주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추가된 5차원의 공간으로 확대시켰고, 전력구조도 병력위주에서 정보집약형으로 변화시켰으며, 전장인식과 정보공유 및 향상된 정밀타격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군사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라크전쟁은 분명히 산업시대의 전쟁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장거리 정밀전(Long-Range Precision Engagement) 등이 복합된 미래전 양상을 보여준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었으며, 첨단 정보·과학전 능력이 전쟁승패에 결정적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전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완벽한 C4I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정밀 첨단무기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였는 바, 항공기 및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으로 이라크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고, 장갑으로 보호된 기계화부대 위주로 기동성 있는 지상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미·영 연합군은 20여 일 간의 작전으로도 이라크 전 지역을 장악하였고, 연합군 측은 650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군의 사상자는 6,500여 명, 포로가 7,300여 명이었으며, 나머지 전력은 와해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와 현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위



3차원 합동전장

적 방위역량' 확보를 목표로 전력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군 구조 개선

미래전은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지·해·공군의 전장공간이 중첩되고 군별 고유영역과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특성으로 인해 합동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통합전력 발휘가 극대화되도록 기능별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단계화 되어 있는 지휘계선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작전반응을 보장하고 국지도 발과 분쟁시에도 신속히 대처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0여 년 간 유지해 온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를 정보화·과학화와 연계하여 기술집약형의 정예화된 질적 구조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3. 전력 증강 추진

전력증강은 현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다는 기초 하에,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위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존 북한위협 대응능력을 우선적으로 완비하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먼저, 현존 북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비하기 위해서 감시·정보·정밀타격 전력의 확보 및 질적개선을 통해 북한 군사력의 양적 우위를 극복하고, 특히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의 침략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방위충분성 전력(防衛充分性 戰力)'을 확보해 나아감과 아울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과학화된 전력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각종 무기체계의 국외도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며, 국외도입 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수출을 고려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전력증강 방향에 부합되는 기능전력별 증강 중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4I/전자전 전력은 한반도 전역 감시 및 정보수집능력의 확보와 실시간 지휘통제 자동화 처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지휘소 자동화 체계, 전술 C4I체계 등의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동/타격 전력은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개선하고, 공세기동전 수행능력 및 전략목표 타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구경다련장, K1A1전차, K-9 자주포 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전력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통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구축함(KDX-Ⅱ), 7,000톤급 구축함(KDX-Ⅲ), 대형수송함, 214급잠수함 등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방공 전력은 방위권내 공중우세 유지와 전략목표 정밀타격능력, 원거리 조기경보 및 전략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F-15K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체계와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의 확보를 추진할 것이다.



한국형 구축함(KDX-Ⅱ)



K1A1 전차



차기 전투기(F-15K)

제2절 군 정보화 추진

1. 정보와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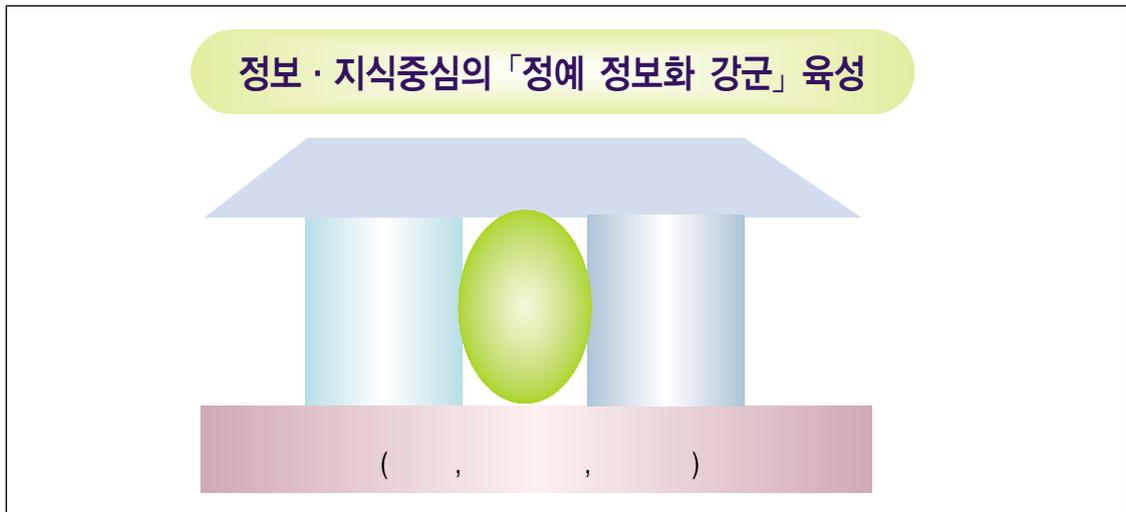
정보통신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산업문명이 정보문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전쟁수행방법이 화력·기동 중심에서 정보·지식 중심으로 변화되며 전쟁 공간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의한 통합된 정보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여 정보화·과학화를 선진국방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국방정보화(e-Defense Vision 2015)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국방정보화 목표 및 추진

국방정보화 목표는 ‘정보·지식 중심의 정예 정보화 군’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통합정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기조는 목표지향적

【도표 4-1】 국방통합정보체계 개념도



이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를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토대로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자원관리정보체계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국방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 2005년까지 기반 및 핵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인 2010년까지는 전 기능체계를 상호연동 또는 통합하여 통합정보체계를 완성한 다음 선진정보체계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

가. 전장관리정보체계

합동C4I체계는 전장을 가시화하고 신속한 지휘결심이 가능하도록 지휘소자동화체계를 중심으로 군사정보체계, 작전기획 및 시행체계, 전술자료분배체계 등을 통합운용토록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전쟁관리체계, 연합사C4I체계, 각군 전술C4I체계를 상호연동시켜 전·평시 하나의 단말기로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상전술C4I체계는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투수행절차를 자동화하여 적보다 먼저 탐지하고 결심하여 먼저 타격하는 전투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해군전술C4I체계는 작전사급 전술제대의 해상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유통, 공유하고 타격수단을 포함한 보유전력의 협조적 교전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KNTDS와 해작사 지휘소자동화체계를 기반으로 모든 전장기능을 통합할 것이다.

공군전술C4I체계는 현재 추진 중인 표적정보·전자정보·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군사정보체계와 MCRC 중심의 작전운영통제체계를 공작사 중심의 작전정보관리체계로 통합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나. 자원관리정보체계

예산관리체계는 먼저 경상운영비 예산편성·관리분야는 체계가 완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투자비 분야는 2003년까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은 2004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의료관리체계는 2002년 기준 수도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운용 중이며, 2003년까지 4개 병원에 추가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16개 전 병원에 확대할 계획이다.

탄약·물자정보체계는 운용 중이며, 국제운송업무는 2003년도에, 장비정비정보체계와 수송정보체계는 200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모든 품목을 전자상거래 체계에 의해 조달하고 각 군의 모든 시설업무를 표준화하여 실시간 자동처리가 가능토록 추진할 것이다.

자료유통분야는 국방사무자동화체계를 2003년도 말까지 웹(Web) 환경으로 개선하고 전군 단일체제로 전환하여 전자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 정보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정보통신기반체계

정보통신망은 광대역의 멀티미디어 정보유통이 가능하도록 국가초고속통신망과 연계하여 증속 및 확대 구축할 것이다. 차세대통신망(NGN)개념을 도입하여 전략/전술통신망을 성능개량하고 컴퓨터체계는 지능화, 기동화, 다기능화하며 각급 제대별로 산재되어 운용하는 전산실을 국방차원의 통합정보관리소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체계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방정보기반을 보호하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침해에 노출된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고 국방 암호장비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각종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 정보화 환경

국방 정보화 중·장기 발전은 정보기술과 국방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발전시키고 국방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운용환경의 확보와 표준화는 물론 무기체계와 자동화정보체계의 상호연동 및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4. 실전적 교육훈련지원체계 구축

교육훈련분야는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없도록 학교교육-부대훈련-교육훈련지원을 지속적으로 통합·지원하는 원격교육체제로 발전시켜 2010년까지 소집형학교 교육과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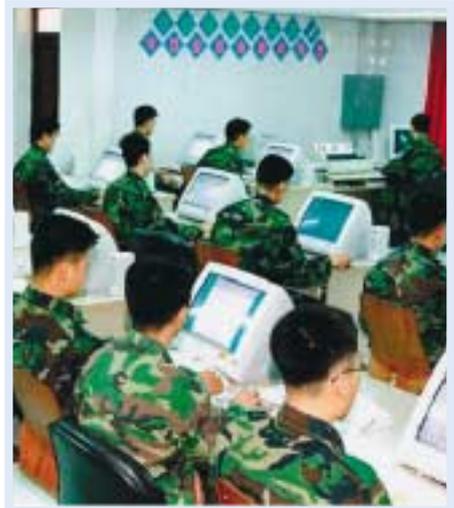
군 도서관 정보화는 도서관리 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하여, 기관별 학술정보 및 소장자료의 공유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교육·연구기관의 도서관 지식 및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전장환경에 맞는 실전경험을 축적하는 육군의 과학화훈련장은 대대급 훈련장을 2004년까지 구축하여 새로운 전술·전기를 개발 검증할 수 있고 제전장기능 통합차원의 전투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종합교육훈련장으로 발전시킨다.

모델링/시뮬레이션체계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위게임모델을 기능별, 목적별로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한국형 위게임체계를 완성하며, 작전수행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작전모의 및 지휘결심지원을 보장하도록 전장관리정보체계 등과 연동·통합한 분산형 위게임체계로 발전시킨다.

5. 장병 정보와 교육 강화

장병정보화교육은 국가시책인 국민정보화교육에 기여하여 장병들에게 군 복무 중에도 정보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대 PC방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PC를 지속적으로 확보, 환경을 개선하여 어학연습, 사이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 생활 중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게 할 것이다.



장병 정보화 교육

제3절 한·미동맹 발전

금년은 한·미동맹이 공식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안보의 기본 축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우리 나라가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우리의 국력도 선진권에 진입하게 되는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제반 안보환경들이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도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의 틀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21세기형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한·미동맹의 역할·성격의 발전

전통적 의미에서 안보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아 위협의 주체가 테러, 마약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고, 안보의 패러다임도 경제·기술·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기존의 대북 억제 위주의 군사중심 동맹에서 보다 포괄적이고도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27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지역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방향



한·미 국방장관회담

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동으로 지키고 증진해 나가는 생산적 동맹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발전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국가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다.

2. 주한미군 기지체계 발전적 조정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른 급격한 도시개발과 확장으로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이 증대하여 한·미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왔다. 이와 같은 민원의 해소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기지운용의 효율성과 전투준비태세의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체계를 핵심권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왔던 용산기지는 가급적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한강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2단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한강이북 미군기지를 동두천 지역의 캠프 케이시와 의정부 지역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제2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한강이남 지역의 핵심권역으로 통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체계의 발전적 조정을 통해 한·미는 주민 민원의 해소와 전투준비태세 강화 등 공동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공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다.

3. 연입군사능력의 연대와

디지털 혁명과 네트워크 혁명으로 비롯된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전쟁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전, 네트워크전, 장거리 정밀타격전 등의 새로운 전쟁방식이 발전되고 있고, 이는 걸프전('91), 코소보전('99), 아프간전('01), 이라크전('03)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전력을 이와 같은 새로운 전쟁개

념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기로 하고 연합군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은 향후 4년 동안 110억불을 투자하여, 정보수집능력 향상, 정밀탄약 비축량 증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속기동여단(Stryker 부대)의 순환배치, 한국의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육군사전배치 비축물자 추가 확보 등 전력 현대화 및 증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군도 자체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대북 억제전력과 정보전력 등 그 동안 미측에 의존해 왔던 핵심전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자위적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노력과 연계하여 그 동안 미군이 담당해왔던 일부 군사임무들을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담당함으로써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능력 있는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안보를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과거 한·미동맹은 주로 미국의 국내 문제나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 양국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출한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미래 한·미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2차 공동협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토대로, 공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상호보완적 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제4절 대외 군사교류 · 협력 강화

1. 대주변국 군사외교

우리 군사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우호 · 협력의 한 · 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균형된 군사관계 발전과 지역내 다자간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주변국 군사외교는 우리 외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군사강대국들의 경쟁과 협력이 교차되는 정치 · 군사적 이해지역이면서,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음으로 인해 냉전적 질서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 등 안보현안에 대한 주변국 군부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군사적 교류 · 협력을 통해 군사적 신뢰와 유대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 대일 군사교류 · 협력

일본과의 군사교류 · 협력은 한 · 일간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한 · 일 양국은 1966년 주일무관부가, 1967년 주한무관부가 개설된 이후 군사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인적교류로 시작된 양국 군사교류는 1994년 이후 국방장관회담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등 군고위급 상호방문과 정례적인 각종 실무회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1998년 10월 3일 동경에서 양국정상이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간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에는 합참 · 통막간 부장급 회의와 한 · 일 해군간 회의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군사적 대화채널이 다양화되었고, 한국과 일본해군은 순수 평화목적의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우리 해군군악대가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하여 양국 군사관계가 일부 조정·연기된 바 있다. 이후 2002년 4월 일본 방위청장관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한다’는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전반적 신뢰관계와 우리 국민의 지지아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2002년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룩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티모르에서의 PKO협력 등은 양국은 물론 지역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시 양국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도에 실시되는 고위급 상호방문 및 사관생도간 친선축구대회 등 다양한 교류·협력은 한·일 양국군의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21세기 새로운 파트너 십’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호증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 대중 군사교류·협력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수교 이래 경제·통상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지난 1998년 11월 양국 정상간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데 이어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基)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정치·군사분야를 포함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중국군 부총참모장 국방장관 예방

이러한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1993년에 주중 한국 무관부, 1994년에 주한 중국 무관부가 개설된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이후 군 체육교류, 국방학술회의 및 군사교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99년에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국방장관회담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각군 참모 총장급 상호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군사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1년 우리 해사 순항분대가 중국 상하이를 최초로 방문하고 2002년에는 우리 항공기의 중국 방문과 함께 중국 함정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군사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3년도에도 부총참모장의 방한에 이어 우리 합참의장의 방중 등 고위급 상호방문과 중국 수송기 방한 등 다양한 군사교류·협력이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한·중 군사관계는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데 발맞추어 군사적 신뢰구축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 지역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다. 대러 군사교류 · 협력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1990년 국교 수교 및 1991년 양국 무관부가 개설된 이후 군 고위급 인사 상호교류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1994년에는 최초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1997년에는 국방정책실무회의와 2000년에는 방산·군수공동위가 최초로 열린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위협한 군사행동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3년 4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시 양국장관은 군사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러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하였다.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 체결

2003년도에도 군고위급 상호방문과 훈련 참관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러시아와 군사관계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적교류, 제도적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4-2】 대주변국 주요 군사교류 현황

() : 최초 개시년도

구 분	일 본	중 국	러 시 아
국방장관 회담	연례화('94년 이후) * '03.3.29 /서울	상호방문('99년 이후) * '01.1.20/서울	상호방문('94년 이후) * '03.4.10/서울
실 무 회 의	국방정책실무회의('94) 안보정책협의회 ('98, 외교+국방) 합참-통막회의('99) 방공실무회의('91)	국방정책협의회('95) 외교·국방회의('02)	국방정책실무회의('97) 군수 방산공동위('00) 해상사고방지이행 협의회('95)
합정상호방문	방일('94) 방한('96)	방중('01) 방한('02)	방러('94) 방한('93)
수송기상호방문	방일('00) 방한('02)	방중('02) 방한('03)	방러('04,예정)
기 타	해상공동훈련('00) 자위대 음악제 참가('00)	체육교류('92)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체결('02)

2.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가. 개 요

냉전 이후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민족·영토·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적 차원의 국지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통상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행되며, 군·민간·경찰·선거감시요원·유

엔 및 국제기구·각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요소가 참가하고 있다. 군의 평화유지활동 가운데 부대단위로 파견되는 평화유지군(PKF : Peace Keeping Force)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치안유지, 민사작전 등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개인자격으로 파견되는 군감시단(MOG : Military Observer Group)은 비무장으로 정전협정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며 순찰, 조사,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경비는 기본적으로 유엔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 경비는 대부분을 해당 파견국이 부담하게 된다.

2003년 5월 현재 세계적으로 총 89개국 약 37,000여 명의 군과 경찰 요원이 동티모르, 콩고민주공화국, 사이프러스 등 14개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 우리 군의 PKO 참여 현황

우리 군은 1993년 소말리아(UNOSOM-Ⅱ)에 공병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동티모르, 앙골라, 서부사하라 등 7개 지역에 5,000여명이 평화유지요원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1999년 10월에는 최초로 특전사를 주축으로 한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함으로써 우리 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명실공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과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보답의 의미는 물론,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3년 5월 현재 295명의 병력을 5개 분쟁지역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는 파병규모면에서 전 세계 30위의 수준이며, 우리 군 요원들은 파견지역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도표 4-3】 한국의 PKO 참여 현황

구 분	유 형	파견기간	인원	교대주기
서 부 사 하 라	의료지원단	'94.9~	20명	6개월
그 루 지 아	군감시요원	'94.10~	7명	1년
인도·파키스탄	군감시요원	'94.11~	9명	1년
동 티 모 르	보 병 대 대	'99.10~	250명	6개월
	사령부 참모	'00.1~	8명	1년
사 이 프 러 스	사 령 관	'02.1.4~	1명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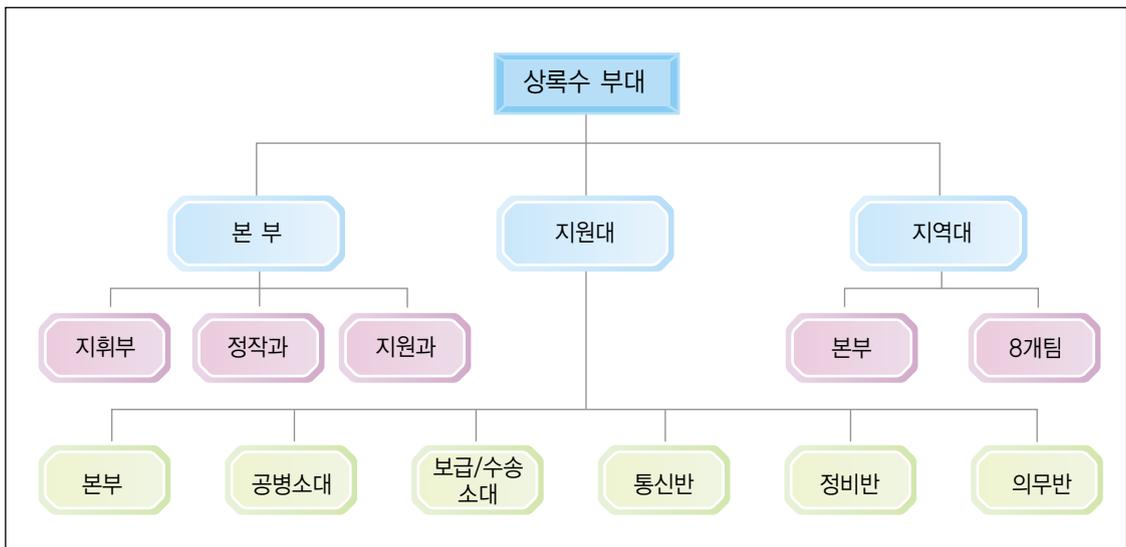
※ '03년 5월 현재, 과거자료는 부록 참조

(1)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 참여

1999년 10월 보병(201명)을 주축으로 수송·보급·통신·의무 등 지원요원을 포함하여 총 420여 명으로 편성된 ‘상록수부대’ 제1진을 10월 22일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일대로 전개하였다. 이후 상록수부대는 2000년 2월 1일 다국적군 가운데 가장 먼저 유엔 평화유지군(UN PKF)으로 전환되었으며, 2002년 1월 13일부로 로스팔마스에서 오쿠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재는 제8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표 4-4】 상록수부대 편성

(2003. 5월 현재)



※ 상록수부대 인원 : 250명(연락단 3명 포함)

상록수부대의 책임지역인 오쿠시 일대는 서티모르 내에 고립된 동티모르의 영토로 약 4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상록수부대는 오쿠시 지역에서 국경선 통제, 책임지역 치안 유지, 민사작전 및 핵심 시설에 대한 경계 제공 등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으며, 2003년 4월 국경선 통제임무는 동티모르에 인계하였다.

상록수부대는 사령부에서 주어진 고유의 임무외에도 순회진료, 방역,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복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의료지원·영화상영·이발·농기구수리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하여 매주 2회 실시하는 민사작전인 ‘푸른 천사(Blue Angel)’ 작전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여 평화유지군에 대해 두터운 신뢰를 주고 있다.

상록수부대의 이와 같은 헌신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은 상록수부대를 ‘다국적군의 왕(말라이 무핀)’으로 부르고 있으며, 현지 유엔 기구로부터 PKO 참여국 중 가장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평가 받고 있다.

동티모르가 2002년 5월 독립하여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유엔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을 감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록수 부대는 2003년 10월에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



상록수 부대 인도적 지원 활동

● 동티모르 파병성과 및 의의

첫째, 한국전쟁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수혜국의 입장에서, 아·태 평화와 안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국가의 입장이 되었다.

둘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동안 평화유지활동에 의료·공병 등 지원부대 위주로 참여하였으나, 우리 군 최초로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파병과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함은 물론,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2)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활동 현황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료지원단은 1994년 9월 제1진(42명)을 파견한 이래 2003년 5월 현재 제18진 20명이 활동 중이다.

국군 의료지원단은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내 유일한 단위부대로서 유엔요원에 대한 1단계 의료지원, 능력 초과 환자의 상급 병원시설로 후송, 24시간 응급환자 조치, 현지 사령부에 대한 방역과 식품 및 수질검사 등의 임무를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진료 활동

수행하고 있다.

우리 파견요원은 현재까지 약 9년 간 45,000여 명의 유엔 요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3)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 활동 현황

우리 군은 1994년에 최초로 군 옵서버를 파견한 이래 현재 인도·파키스탄 유엔정전감시단(UNMOGIP) 및 그루지아 유엔정전감시단(UNOMIG)에 각각 9명과 7명의 영관급 장교를 군 옵서버로 파견하고 있다. 이들 2개 지역에 파견된 우리 군 장교들은 현지사령부의 통제하에 정전협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4)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사령관 진출

한국군은 PKO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1년 10월 UN 사무국으로부터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PKF)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군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황진하 장군이 2002년 1월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에 진출하게 되었다. 황진하 사령관은 군사·안보문제에 대해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를 보좌하며, 사이프러스 내에서의 분쟁재발 방지와 평화유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유엔 상비체제 참여

유엔상비체제는 유엔 회원국이 평시 자국의 특정부대와 장비 등을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사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이 요청할 경우 합의된 반응 시간 내에 신속히 공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1995년 UN에 800여 명 규모의 상비체제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UN에서 상정한 상비체제 수준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유엔은 기존의 상비체제에 「신속배치단계(Rapid Deployment Level)」개념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동 제도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신속배치단계」란 5,000명 규모의 통상적 PKO에는 30일 이내,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PKO에는 90일 이내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엔에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방부는 향후 PKO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외교부와 협조하여 「신속배치단계」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평소 부대를 지정하여 교육훈련 체제를 갖추는 등 UN 상비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 해외파병 관련법 제정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지금까지 PKO에 관한 별도 법령의 뒷받침 없이 PKO에 참여해 왔다.

이로 인해 파병할 때마다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병시기를 상실하여 참여가 좌절될 수도 있으며, 해외파병요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해외파병 업무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외 파병요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파병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PKO 교육체계 발전

국방부는 국방대학교에 PKO 학과를 설치하여 군읍서버와 참모요원 등 간부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전사 교육단을 PKO부대단위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파견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 PKO 학과의 조직이 빈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 여건이 불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PKO와 파병업무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PKO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지원센터’를 국방대학교에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센터가 설립되면 군인뿐 아니라, 경찰·민간인 그리고 외국군에 대한 수탁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PKO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3. 국제군비통제 및 다자안보협력 활동

가. 국제군비통제 활동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의 감축 및 비확산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비통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UN, 제네바군축회의(CD),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중심으로 다자 차원의 군축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제군축 및 비확산 노력이 국제평화와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국제군비통제 체제에 적극 가입하고 관련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으며, 이들 각종 국제 레짐(Regime)들에 대한 당사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과 신인도를 증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물질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등의 핵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북한을 포함한 비준 의무국(5대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원자로 보유국 등 44개국)의 조기 서명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생산 및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억제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포기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제적인 화학무기 폐기 및 감축 추세에 부응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및 UN의 화학무기 사찰·검증활동 등과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OPCW 집행이사회에서 CWC 미가입국의 조속한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CWC 보편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토록 하여 북한의 CWC 가입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OPCW나 UN 등의 화학무기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균요원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화에 기여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2001년 5월에 대인지뢰의 비인도적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재래식무

기금지협약(CCW)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지뢰사용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에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후방지역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후방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방지역 총 39개 기지에 매설된 지뢰 중 우선적으로 도심지역 7개소의 지뢰를 2002년까지 제거 완료하였다. 금년에는 11개소의 지뢰를 추가로 제거하는 등 향후 후방지역의 모든 대인지뢰를 2006년까지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며,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UN 지뢰제거 신탁기금 제공 및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나.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 참여

1990년 이후 우리 나라는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 안보환경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들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우발분쟁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맹정책과 병행하여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중요한 안보개념으로 채택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 긴장완화, 평화공존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 대화체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아·태지역내 정부차원의 주요 다자안보협력대화체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다. ARF는 최근 지역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11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NPT 복귀와 IAEA와의 협력 재개 등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체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의 해결에 지역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비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인 다양한 지역 다자안보협력대화체들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대안들을 정부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대테러 전쟁과 국군의 파병

가. 개요

20세기 말 냉전 종식 이후 테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1세기 초에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뉴욕 쌍둥이 빌딩에 대한 테러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증명하였으며, 대테러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은 9·11테러의 직접 지원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데 이어, 대테러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위협 제거라는 명분하에 이라크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계획하여 2003년 3월 20일 실행에 옮겼다.

미국이 주도한 2개의 전쟁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11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과 알카이다를 응징하겠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항구적 자유작전)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시행되었으나,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찬반 양론이 격렬했으며, 지금도 그 휴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2개의 전쟁에 현재 1,178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이 파병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국군의 파병

9·11테러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대테러 전쟁은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of Enduring Freedom)’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공습으로 시작되었다.

항구적 자유작전은 4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01.9~10) 여건조성(Set Condition) 단계에서는 군사협력 및 군사력 전개에 작전주안을 두었으며, 2단계('01.10.8~12월)는 초기작전(Initial Combat)단계로 항공작전 및 특수부대에 의한 작전에 주안을 두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3단계('01.12.8~현재)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에서는 항공작전 및 지상 작

전에 주안을 두어 사실상 전투를 종결하였으며, 4단계 안정화 작전(Stabilization)은 알카이다 잔당 소탕 및 빈 라덴 체포에 주안을 두고 아프간 과도 정부('02. 7월 수립)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3단계와 4단계 작전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4단계로 완전 전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안정화 작전은 상당기간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프간을 8개 지방행정구역으로 분할하여 지방 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에 의한 민사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중 3개 지역은 미국이 주도하여 민사작전을 이미 착수하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부 알카이다 잔당들에 의한 소규모 테러 행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군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항구적 자유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2001년 9월 24일 대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 육군의료지원단, 해·공군수송지원단을 파견하였으며, 미국의 요청에 의거 2002년 2월에 건설공병대를 추가적으로 파견하였다.

의료지원단은 최초 100명으로 구성 2002년 2월 27일에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항에 파견하여 마나스 기지에 주둔중인 미군 및 동맹국군의 진료와 대민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2진은 2002년 8월에 전개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전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3진('03. 2월 전개)부터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카불 북방 40km에 위치한 미군 최대기지로 CJTF-180 위치)에 본부를 두고, 마나스에 파견대를 운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약 6만명의 동맹국 군과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민을 진료함은 물론, 태권도를 가르치고 키르기스스탄 대학생(한국어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위 선양과 국가간의 관계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군 수송지원단은 최초 LST(Landing Ship Tank : 상륙함) 1척과 인원 171명으로 구성하여, 한국군으로는 가장 먼저 2001년 12월 18일 진해항을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미 태평양사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금은 6진 163명이 작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총16회 임무를 부여받아 5천여톤의 미군 물자를 수송하고 특수작전을 지원하였다.

공군 수송지원단은 김해 비행장을 모기지로 하여 2001년 12월 28일 76명으로 임무를 개시하여 주로 김해-싱가포르-디에고 가르시아간 정기 공수를 비롯하여 미 태평양사 작전 구역내의 미군 물자 수송 및 병력 수송을 담당하여 왔으며, 지금은 6진 78명이 작전 중에 있다. 공군 수송지원단은 지금까지 62회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물자 250여톤, 병력

577명 등을 수송하였다.

건설공병지원단은 미국의 요청에 의거 150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 2월 27일 의료지원단 3진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 전개하여 임무수행 중에 있으며, 주로 바그람 기지 운영을 위한 건설 및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기지내 공사가 완료되면 대민 지원 임무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다. 이라크 전쟁과 국군의 파병

(1) 이라크 자유 작전 경과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대량 살상무기 생산 및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라크 자유작전(OIF : Operation Iraq Freedom)이라는 명목하에 2003년 3월 20일 미·영 연합군으로 이라크를 공습하였다.

이라크 자유작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1단계 여건조성(Set Condition)단계에서는 이라크 내부 분열유도 및 점진적 약화(Attrition), 군사력 사전 전개에 작전 주안을 두었으며, 2단계 초기작전(Initial Combat) 단계에서는 후세인 제거 및 전쟁 지휘체계 무력화에 작전 주안을 두었다. 3단계('03.3.20~4.15) 결정적 작전(Desicive Operation)에서는 주요전력을 투입하여 다면적 동시전투를 강요하여 바그다드 및 티그리트를 함락함으로써 주요전투는 종결하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전쟁 종결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43일간의 이라크전쟁은 미국 및 동맹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으며, 현재는 4단계(4.15~현재) 안정화 작전(Stabilization)으로 전환하여 군사력 재배치, 이라크 재건 및 과도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2) 파병 배경 및 필요성

미국은 2002년 11월과 2003년 3월 2차례에 걸쳐 이라크전쟁에 대비, 인도적 지원 및 전후복구, 전투근무지원분야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사를 타진해온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왔다.

3월 20일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공식적인 정부입장을 밝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3월 21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전쟁 명분의 모호성, 미국의 적법절차 무시 등의 논란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및 반전여론이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도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파병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파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파병반대 여론과 시위 등이 확산되면서 국회 본회의가 2차례나 연기되었으며, 파병과 관련하여 의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 위원회를 이틀 동안 실시하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국군의 조속한 파병을 위하여 국방부는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파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시키는 한편,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해서는 파병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언론 및 국방간행물을 통하여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병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와 TV토론 등 국민의 지지여론 결집을 위한 노력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최종 가결함으로써 이라크전쟁 지원을 위한 파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적인 반전,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한·미 동맹관계 강화 측면이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14만 명에 달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한국을 방어해 준 혈맹이면서, 현재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37,0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등 특별한 쌍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 방위의 공동운명체인 미국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있다. 이런 면에서 이라크전 파병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위상과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테러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후세인의 정권을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 및 동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명분이 부족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쟁이 종결된 지금은 우리 정부의 판단이 옳았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지원 부대들이 전후복구 및 인도적 구호활동을 위한 부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파병목적에 부합

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에너지 자원의 확보, 전후복구 등 국익을 고려하였다. 즉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 중 77%가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보장하고 그 동안 후세인 정권 하에서의 피폐된 경제를 부흥하고 전쟁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막대한 시장에 참여하는데 파병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그 외에 파병을 통하여 전쟁 경험을 체득함은 물론, 외국군과의 작전을 통하여 연합작전을 배양하고, 동맹 및 관련국가들의 군사 외교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군의 파병과 향후 전망

국군의 파병은 파병부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3주간의 파병전 교육과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부대를 파병하였다. 4월 7일에는 쿠웨이트 현지 협조단 3명을, 4월 17일에는 선발대 20명을 쿠웨이트에 우선 파병하여 현지의 작전 환경과 임무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 관계국과 협조토록 하였다.

쿠웨이트 입국시에는 SOFA체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미군과 쿠웨이트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파병은 무리없이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이어서 4월 30일에는 제1제대 326명(건설공병 236명, 의료지원단 90명)을 쿠웨이트에 전개시켜 1주일간 미군 책임하에 현지적응훈련(RSO)을 실시한 후 나시리아로 이동 전개하였으며, 5월 14일에 제2제대 329명(건설공병)을 파병함으로써 계획된 인원 전원이 파병지역에 전개 완료하였다.

2003년 4월 우리 군의 이라크파병 이후, 의료지원단은 주2회 지방 순회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일일 평균 13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7월 11일 병원이 개원되면 매일 진료가 가능해져 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계획이다.

건설공병지원단도 전쟁과 오랜 경제 침체로 폐허가 된 나시리아 지방의 사회 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의 노후시설, 상·하수도 시설, 학교 보수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서희부대 이라크 출국

이러한 활동 결과, 초기 파병목적과 부대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고양할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차원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세계 동맹·우방국들의 지원 하에 현재 이라크의 전반적인 사정은 호전되고 있으나, 향후 2~3년간은 4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동맹·우방국들에 의한 안정화 작전이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항구적 자유작전이나 이라크자유작전과 같이 어떤 특정국가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전쟁의 형태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이 주도하는 PKO와는 달리 참여국가가 전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파병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나 법령의 정비는 물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파병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방부는 유엔 PKO활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주민 의료지원

제5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1.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와 남북 및 대외관계 등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정부」는 이러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중심’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협과 전쟁발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의 증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군사문제가 미·북간의 문제로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문제 토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은 군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예전과 달리 ‘실리추구’를 위해서 남북대화 자체를 회피하거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군사문제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감안하여, 우리 군은 확고한 대북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 구상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노반공사

제1단계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로서, 상호 비방·중상 및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실천해 가는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보장을 지속하면서, 이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단계는 남북군사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로서, 우선적으로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며,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 인사 접촉·교류 확대 등 신뢰구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단계는 남북관계의 진전정도를 감안하여 군사력의 운용 통제 및 상호 검증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대규모 군사연습 및 부대활동의 통보와 통제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추진하며, 남북공동 사찰·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증체제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질적인 추진은 상호 군사적 투명성과 군사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조기에 군비통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공적 추진을 군사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다.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 핵문제는 2002년 10월 초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일행의 북한 방문시 북한이 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촉발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의 HEU프로그램을 명백한 ‘제네바 기본합의(AF)’ 위반으로 간주하고, 11월 14일 대북 중유공급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북한은 12월 중순부터 2003년 2월 말까지 핵동결 해제 선언, 핵 동결시설 봉인 제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5MWe원자로 재가동 등 일련의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핵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IAEA는 2003년 2월 12일 특별이사회를 열고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하였고, UN안보리는 4월 9일 북핵문제를 공식 논의하였다. 그러나 UN안보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사태해결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공식적인 문건을 채택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4월 23일 미국 북

한 중국이 참가하는 북경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및 재처리 추진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회담이 예정보다 하루 빨리 종료되었다.

한편 NPT 평가회의준비위원회는 2003년 5월 9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의장요약문(Factual Summary)'을 채택하였는바, 북한에 핵무기계획 폐기와 NPT 안전조치 의무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다자차원의 북핵문제 해결을 권고하였다. 또한 6월 1일~3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계획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하고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非可逆的)인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6월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에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 유지, NPT 복귀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됨은 물론, 동북아의 핵군비경쟁을 유발하여 역내(域內)군사력 불안정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간 북핵문제에 대한 목표, 추진전략 등 모든 과정에서 공조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공조 기반을 마련하고, 대북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가용한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게 핵 개발이 결코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며, 북한 스스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즉, 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발전을 선택할 것인지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군은 군 고위급 상호방문, 국방정책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 등 군사외교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핵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 연합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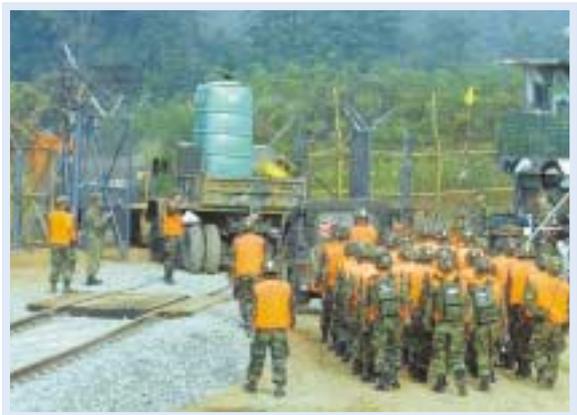
3.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군사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오랜 분단상황이 가져다주는 남북간의 불신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의 장애요소를 점차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과거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관계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평화통일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발전을 지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추진 전략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즉,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우리 군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과 관련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사당국간 접촉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 상징성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건설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북 공사상황실 간에는 군 직통전화



경의선 철도연결

를 개설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함으로써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이 지원하는 주요 공사내용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지역의 지뢰제거와 노반공사로서, 군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공사착수에 이어 2002년 9월 18일에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추가로 착수하였다. 남북 쌍방은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남북 쌍방은 지난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현장의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철도연결 기념식을 가졌다. 군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도·도로 연결공사로 인한 군사적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지역환경에 맞는 군사대비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군사령부(UNC)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사로 인한 정전협정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해로관광사업 및 2003년 2월부터 실시 중인 육로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의 구조·구난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 조성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취약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5장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제1절 인사개혁

제2절 국방조직 정비

제3절 병역 및 예비군 제도 개선

제4절 군 사법제도 개선

제5절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제고

제1절 인사개혁

1. 정예국방인력 운영

우리 군은 한반도 및 주변국의 급변하는 안보정세의 변화와 과학기술 및 첨단무기 체계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을 양성·관리한다는 목표하에, 효율적인 인력운영체제 발전, 국방전문인력 육성, 여군인력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력운영체제 발전을 위해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전투력 발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피라밋형 인력구조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별·계급별·병과별 균형을 유지하며, 계급별 적정 복무기간을 재설정하고, 상위계급으로의 원활한 인력순환이 되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군장교 최초 전투함 배치

또한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래 전장환경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적정 소요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 하에 민간전문인력을 획득 및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개인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며, 획득-교육-보직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 관리를 할 예정이다.

여군인력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추세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수 여성인력이 군을 지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2020년까지 간부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활용분야도 간호 및 행정병과 위주에서 전 병과로 확대하되 여성의 특성에 부합되는 직위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우수 여성들이 군에 들어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매년 여군인력 활용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군인력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 공정한 인사관리

국방부는 진급·보직·교육 등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정립하여 진급·보직·교육에서 능력을 고려한 출신별 균형을 유지하고, 진급방침 및 공석을 결정하여 진급심사 전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요 보직자 선발 및 교육 대상인원 선발시 제대별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재적소 원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2003년 5월 23일 국방부훈령으로 제정하였으며, 향후 이를 기초로 진급공석 및 방침, 인사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며, 각군은 진급-보직-교육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제대별로 활성화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진급 및 보직과 관련하여 「국방부 인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003년 4월 12일 각 군에 하달하였으며, 앞으로 각 군별로 자군의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육군에서는 금년부터 대위에서 소령진급 심사 시 출신별 공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 및 장차 활용성을 고려하여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한 능력있는 우수자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점차 자유경쟁 대상 계급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관 기수별 진급관리로 능력있는 후배기수의 진출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년도 진급자는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시 동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진급관리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수자원의 조기진출이 보장될 전망이다.

또한, 군 특성을 고려한 공개평정제도와 다면평가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각 군은 고유의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계급, 적용 시기, 시행방법 등을 연구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진급적기 경과자에 대한 복무의욕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복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무 우수자에게는 명예진급 및 임기제 진급의 확대, 취업지원 우선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명예전역 등을 활성화하는 반면, 불성실 근무자나 군 명예

실추자는 조기에 전역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인재육성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및 보직관리가 보장되도록 각종 연(緣)에 의한 인사청탁 등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사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조직 정비

1. 배경 및 의미

현재의 국방조직은 국책사업,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 및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 또는 비편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합참은 전쟁기획 및 수행의 중추조직으로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적합한 조직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조직 전반에 걸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업무혁신을 통하여 비능률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병력과 예산을 절감하여 전력증강 소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2. 조직 정비 방향

국방부 본부 조직의 정비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개발 및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책 및 기획 기능을 조정 보강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은 적정 관리범위로 개선하여 업무수행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구조를 피라밋형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상위 직위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불요불급한 상위직위의 정비와 함께, 군별 보직의 형평성을 기하며, 장차 한·미연합 지휘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부서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독자적 전쟁 수행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각군 본부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된 정보화·과학화 군 건설을 위해 감·실 기능을 재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소규모 과를 정비하고, 정보화 및 전력투자 사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작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군수·동원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종 위원회·사업단 등의 한시 조직과 비편제 기구를 정비하여 T/F운용을 활성화하며, 운영이 불가피한 조직은 편제화하고 기타 조직은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병역 및 예비군 제도 개선

1. 연역병 복무기간 단축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역병 복무기간이 군별로 각각 2개월 단축된다.

그리고, 1980년대 출산을 저하로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5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나, 현행 연간 6만 6천여 명의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 또는 폐지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하여 부족인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표 5-1】 입영시기별 단축기간

입영시기	단축기간		
	육군/해병대	해 군	공 군
'01. 4			1주
'01. 5			
'01. 6		1주	
'01. 7			
'01. 8	1주		
'01. 9			
'01.10		2주	
'01.11	2주		
'01.12			
'02. 1			
'02.2~5		3주	
'02.6~9		1개월	
'02.10~'03.1		1개월 1주	
'03. 2~5		1개월 2주	
'03. 6~8		1개월 3주	
'03. 9~		2개월 미만	
'03.10~		2개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병역의무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도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정비·기술분야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와 분대장 직위를 부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2001년 8월 입영자(2003년 10월 전역자)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며, 이 경우 2003년 10월 입영자부터는 2개월이 단축된다.

2. 병무행정 개선

가. 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실현

(1)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본인선택 제도 확대

병무행정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과정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병무행정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거부감이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자율적 이행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본인이 선택 가능한 공석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고, 계획범위내에서 적성을 고려하여 「열차표 예매」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도표 5-2】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진 실적

구분 \ 연도	'01년도	'02년도	'03년도
입영인원	225,500	218,300	182,800
본인선택	30,500 (13.5%)	49,200 (22.5%)	60,000 (32.8%)

(2) 육군병 동반입대/복무제도 시행

동반입대/복무제도는 친구, 동료 등 2명 단위로 동반입대 희망자를 모집병으로 선발하고 신병 교육 후 동일 내무생활권 단위로 배치하여 전역시까지 함께 복무하는 제도로써 2003년도(계획인원 : 20,000명)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반입대/복무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입영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 생활에 조기 적응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접수 첫날 지원자가 모집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병역의무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군은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모집인원 및 복무지역 등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반 입대/복무

(3) 군 복무시 사회적성 활용 기회 확대

병역의무자의 사회기술과 전문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군 복무 중에도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군 특기병 모집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원서 접수, 합격자 선발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선호중심의 모집 제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로 국민신뢰 제고

(1)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범위 확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제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제도’는 현행 1급 이상 5,997개 직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개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자중 4급 이상(26,000여 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

【도표 5-3】 공직자등 병역사항 공개 실적

(’03. 6. 30 현재)

구분	계	본인	직계비속
인원(명)	25,379	12,133	13,246

를'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사회관심 병역자원 특별관리제도 도입 추진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회 불신풍조를 제거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의무 이행 기풍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고소득층,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역 특별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 병역처분, 복무관리 및 국외이주 허가 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객관적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통합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예비군 제도 개선

국가안보의 긴요전력으로서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까지 편성하여 국방부-각군본부-수입군부대를 통하여 지휘관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전력 내실화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표 5-4】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예비군 1년차 훈련	소집점검(4시간)	동원훈련 실시	부대 강제유지 훈련 보장
훈련면제 확대	1년(8년차)	2년(7, 8년차)	7·8년차 예비군비상소집망 점검(연1회)
부대단위 동원훈련	3박4일	2박3일	
쌍용훈련	3박4일	현행 유지	훈련참가 예비군 5년차 향방훈련(8시간) 면제

또한 예비군 훈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동원훈련 불참자는 과거 해당 지역부대로 출·퇴근하여 훈련에 참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동원소집부대에 재입영토록 개선하였다. 예비군훈련 소집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집 통보토록 하고 훈련일정도 인터넷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예비군훈련 중식비는 2003년도에 종래의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하여 급식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

이다.

우리 군은 유사시 예비군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 육성지원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예비군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 부상·사망시에 적용되는 예비군 보상 및 가료제도를 개선하여 2003년도부터 예비군 가료시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을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 평균의 60%에서 70%로 인상하고, 민간병(의)원 가료기간을 3일 이내에서 부대장 판단 하에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재 예비군은 지역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군의 장비와 물자수준이 비교적 열악한 상태로서, 앞으로 우리 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구형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향방물자 보유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4절 군 사법제도 개선

1. 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군의 사법제도는 1946년 미 육군형법전을 번역한 국방경비법을 제정한 이래,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신정부 출범에 맞춰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군기와 질서유지 및 사법적 정의 구현’이라는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장병의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25일 국방연구위원회에 ‘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인권보장 강화 및 법무병과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 되면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보장이 보다 잘 조화된 군 사법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군 사법제도 주요 개선내용

가. 지휘계선과 분리된 국방부 소속 순회 군판사단 운영

현행 군판사 제도는 각군본부 소속의 대위, 소령급 법무관을 군판사로 임명하여 군단급에 1명씩 파견하고, 인접군단 군판사와 교차지원하는 형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예하 사단 및 군단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군판사 조직 운영체계에 대하여, 당해부대 지휘관 등에 의한 간섭으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 군판사의 경력이 일천하여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군 전체 재판사건의 규모에 비하여 군 판사수가 많아 인력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 비판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법제도 개선은 군 판사를 재판부대의 지휘계선 및 검찰과 분리되도록 국방부에 통합된 '순회 군판사단'을 편성하고,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지역 내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사건을 담당하게 하고, 순회 군판사는 직급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중령, 대령 중에서 임명하며, 근무평정을 포함한 인사관리도 군 판사단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나. 지휘관 확인조치권 제한, 재판개입 금지 제도화

군사법 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지휘관이 소송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휘관에게 군대의 군기유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러한 군사재판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군사법 제도에 대한 주요 불신요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지휘관에 의한 감형제도 운영상의 형평성 시비를 일소하고 군사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재판 업무에 대해 지휘관을 포함한 외부인사나 조직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다.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지원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국선변호 장교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였다.

라. 입창절차 및 영창시설 개선 추진

병사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신체적 구금효과'를 가져오는 현행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입창시 법무장교에 의한 사전심사제 도입, 6개월 미만 기결수를 영창에 수용하는 제도 폐지 및 영창시설의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 법무장교 획득제도 및 인사관리 개선

법무병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장기장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종래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순환보직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각 특기 중심의 전문화 인사관리방식으로 바꾸어 상호 직책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법무장교의 확보를 위하여 장기법무장교에 대한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해 갈 예정이다.

제5절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제고

1. 국방획득 개발 추진방향

무기체계가 점차 고도정밀화·복합화 되면서 획득비용이 증가하고, 핵심기술 개발비용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 획득·개발사업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는, 국외도입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추가소요되더라도 국내개발·생산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분야나 독자적인 기술능력 확보가 긴요한 분야는 국방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가용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군은 아래와 같이 21세기 획득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방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획득·개발 추진중점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표 5-5】 국방획득·개발 발전체계



아울러, 국방획득 개발의 3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표 5-6】 국방획득 개발 3대 추진방향

- 전력증강 사업의 「개방형 의사결정체제」 적용
- 연구개발·방위산업 정책의 발전
- 효율적, 경제적인 획득·개발사업 추진

첫째는, 전력증강사업의 「개방형 의사결정체제」의 적용이다. 획득·개발사업 추진사업추진단계별로 개방형 의사결정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획득·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다.

둘째는, 연구개발·방위산업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는 연구개발 분야 및 방위산업체의 실상을 명확히 진단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획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획득·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업관리 기능 및 역할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 및 장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도록 할 것이다.

2. 전력증강사업의 「개방형 의사결정체제」 적용

기존의 전력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책임성을 강조하여 대부분 업무수행 조직계선에서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책임성과 신속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책임과 권한이 사업담당조직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사업담당 조직의 전문성 부족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실화될 염려가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력증강사업의 의사결정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였다.

「개방형 의사결정체제」는 주요 전력투자사업의 도입·추진방법 결정, 기종결정, 대상업체 선정 등 사업관리상의 제반 의사결정을 「획득·개발심의회」와 「확대획득·개발심의회」에서 담당하며, 예산집행계획 승인은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회의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을 향

상시키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부서 및 정부부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함이다.

【도표 5-7】 의사결정 체계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의사결정 방식	결재처리방식	회의체 결정방식
사업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득회의 • 확대획득회의 • 사업담당별 조직계선 * 사업담당별 조직계선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득 개발심의회 • 확대획득 개발심의회 • 사업담당별 조직계선 * 심의회에서 대부분 심의 결정
사업(예산)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활성화 미흡, 정부관련 부처 참여실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활성화, 정부관련부처 실질적 참여 유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시 책임성·신속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시 전문성 보장 • 사업추진간 공정성·투명성 보장 및 확대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또한 전력증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 심의회를 활성화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는 국가산업발전과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3. 연구개발·방위산업 정책의 발전

가. 연구개발 정책 발전 및 연구환경 개선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책 발전 및 연구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저비용·고효율의 연구개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민·군 호환성을 고려한 대형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영역을 핵심기술개발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연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정상급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발전시킬 것이며,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방위산업 정책 발전

국방부는 「기술개발 축적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정책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방산업체 자체개발 촉진 및 기술수준 제고를 위하여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업체자체개발시 개발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 계열화제도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전담체제를 유지하되 기타분야는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 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국산화 개발에 대한 유인 보상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가능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방부와 방진회 내에 수출지원 전담조직을 보강하며, 해외무관 등을 활용하여 방산수출 세일즈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4.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획득 개발사업 추진

자주국방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방비의 지속적인 하향배분 추세에 따라 전력투자비 역시 1997년 이후 계속 감소되다가 2002년부터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전력투자비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2003년도 국방비 전체 규모는 2002년 보다 6.5% 증가한 17조 4,264억원이며, 전력투자비 규모는

【도표 5-8】 2003년도 전력투자비 편성 현황

구 분	계	C4I · 정보전력	기동 · 타격전력	해상 · 상륙전력	공중 · 방공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
편성(억원)	57,328	3,261	6,100	9,236	12,597	20,321	5,813
비 율(%)	100	6	11	16	22	35	10

2002년 보다 4.7% 증가한 5조 7,328억원('03년 국방비의 32.9%) 규모로 편성되었다. 한편, 2003년도의 주요추진사업은 아래와 같다.

【도표 5-9】 2003년도 주요사업

구 분	계 속 사 업	착 수 사 업
C4I · 정보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자형 전술통신체계 · 무인정찰기(UA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함정용 전자전체계 ·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등
기동 · 타격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다련장 · K-9 자주포, K1A1 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보병사단 개편 · 헬기 적외선 영상장비
해상 · 상륙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구축함(KDX-Ⅱ/Ⅲ) · 214급잠수함(KSS-Ⅱ), 대형수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고속정(PKX)
공중 · 방공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15K 전투기, KF-16 추가 생산 ·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훈련기(T-50) 양산 ·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등
지 원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예비탄약, 편제장비보강, 장비유지 등 군수지원 · 방위비분담금, 불곰 2차사업 등 	
연 구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여건에 맞는 차세대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배양 · 차기 전차, 군 위성통신체계 등 	

무기체계 국외도입시에는 「경쟁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절충교역 및 방산수출 등과 연계한 내실있는 국외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외업체 제안서 접수 전에 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함으로써 무기도입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경쟁 입찰로 기종결정을 하는 등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여 획득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수품 조달을 위해 상용품목 사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비무기체계는 상용품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규격 완화 및 폐지를 지속 추진하며, 무기체계를 완성장비 위주로 획득하기보다는 성능개량을 통해 무기·장비를 단계별로 소요기획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시에도 사전계획성능개량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수명연장이 가능한 장비는 최대한 수명을 연장하여 활용하는 등 성능개량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전력증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한 획득 전문인력의 확보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전력증강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고도의 정책적 마인드, 첨단기술 이해, 과학적 관리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교우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자원의 확보로부터 장기보직, 주기적인 직무교육까지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사관리와 교육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해당 분야에 직접 연관된 직무지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 위탁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제6장

장병 복지 및 병영환경 개선

제1절 장병 복지 개선

제2절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

제3절 예비역 복지 증진

제1절 장병 복지 개선

장병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 복지 발전계획」을 기초로 병영시설 및 군 간부 숙소의 획기적 개선, 직업군인 처우개선, 병 봉급 현실화, 현역병 휴가중 건강보험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후·협소한 병영시설 및 군 간부 숙소를 사회발전 추세에 부응하도록 단계적으로 현대화 해나갈 것이다.

직업군인의 열악한 군 숙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군숙소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8,77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결과, 15평 이하 및 25년 이상의 협소·노후관사 12,323세대를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관사의 38%를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04~'08)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5년 이상 노후 및 15평 이하 협소관사를 국민주택규모 수준인 24~32평형으로 개선(26,954세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군 숙소 건립을 최소화하고 매입 및 전세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신간부 숙소는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숙소 및 부족소요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실당 2~3명씩 거주함으로써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뿐 아니라, 퇴근 후 충분한 휴식 및 재충전이 곤란하여 부대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04~'08)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부족 숙소를 확보하고 25년 이상 된 노후숙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병의 병영시설은 1960~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 협소한 구형 통합막사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대단위 내무반 구조로 개인 생활여건이 미흡하고, 1인당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하계에는 정상적인 취침마저 곤란한 실정이다. 앞으로 열악한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단순 수용 위주의 침상형 통합내무반 시설을 분대단위 침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

대형 내무반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며, 군 특성에 부합되도록 군인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과 별거수당을 신설하고 중·소령급 참모직위 특정업무비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군 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군인 보수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수인력 획득 및 직업군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보수를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 경비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병의 처우개선은 급식, 피복, 시설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을 기준시 병 월평균 보수액은 24,800원으로서 소요경비와 비교시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사가 가정송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사간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사 생계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병봉급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월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가정송금 근절은 물론 절약정신 함양 등 국민교육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현역병은 휴가기간 중에도 군병원 이용이 가능하나 실제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군병원 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병사 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불만과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휴가 중인 현역병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역병은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역병이 휴가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각군 복지시설 관리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각 군별 균등한 복지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군 복지시설의 관리를 일원화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

1. 추진배경

창군 이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정신을 중시하는 군대문화는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근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군대문화는 전통적 유교사상의 토대 위에 구 일본군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미군의 실용주의 문화가 혼재되어, 고유의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식과 행태가 군내에 여과없이 유입됨으로써 군의 전통적 가치관이 혼돈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문화마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개혁차원에서 기존의 군대문화 중 긍정적 요소는 계승 발전시키고 부정적 요소는 과감히 버려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군은 잘못된 군대문화를 청산하고 건전한 근무기풍을 조성하며 간부의 직업윤리와 군인관을 재정립하여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2. 추진방향

바람직한 군대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기본임무 및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가치관 즉,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위국·위민의 국가관,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업군인의 사생관,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과 보람을 갖는 직업관을 확립토록 할 것이다.

나아가, 군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 군대문화를 창출하고 그릇된 관행과 부패·비리·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현 시점에서의 가치관으로 재조명하여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재판단하여 건전한 군대문화를 창출하고 구현할 것이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열린 문화, 부하를 리더로 육성하는 지도문화, 민·관과 정보교류 확대 및 개인능력 계발여건 부여 등 정보지식사회의 학습문화, 육·

해·공군의 순환교육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3군 합동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병사들에 대해서는 병영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선진화된 병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활기찬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영시설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병영생활 구조를 '자율'에 의한 능동적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과표를 개선하며, 병영내 여가활동 여건조성과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군 생활이 유익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3절 예비역 복지 증진

예비역에 대한 군의 정책지원 방향은 경제적 고충으로부터 해소, 건강관리, 여가시간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보장과 취업직위 확대, 연금제도 개선, 군 복지시설 이용여건 확대 및 현역과 동등한 복지혜택 부여, 국가·사회적 인식제고 및 예우 증진 등의 각종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2년 말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2000년 법 개정 이후 문제가 되었던 상하계급간 연금 역전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2002년 대비 대폭적인 연금인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적 고충 해소에 기여하였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군 복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재취업률은 27.3% 정도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취업보장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직업보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취업지원 정책개발,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취업 가능한 군·내외 취업직위 발굴과 확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취업전략과 연계한 직업보도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통해 전역후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역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업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군체력단련장, 군병원, 기타 각종 군복지시설을 예비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지원 범위 및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체력단련장을 이용시 이용기회 및 입장료를 현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20년 이상 장기복무 예비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군 병원 무료진료 범위를 군병원 진료능력 및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수도통합병원내 장의예식장을 설치하여 예비역의 장의지원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역간부들이 노후생활을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본시설과 여가활용 시설을 갖춘 종합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7장 국방예산

제1절 2003년도 국방예산

제2절 국방비 배분 추세와 국방운영의 실상

제3절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

제4절 자주적 선진국방을 위한 소요

제1절 2003년도 국방예산

2003년도 국방예산은 2002년도 대비 6.5% 증가한 17조 4,264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5.6%,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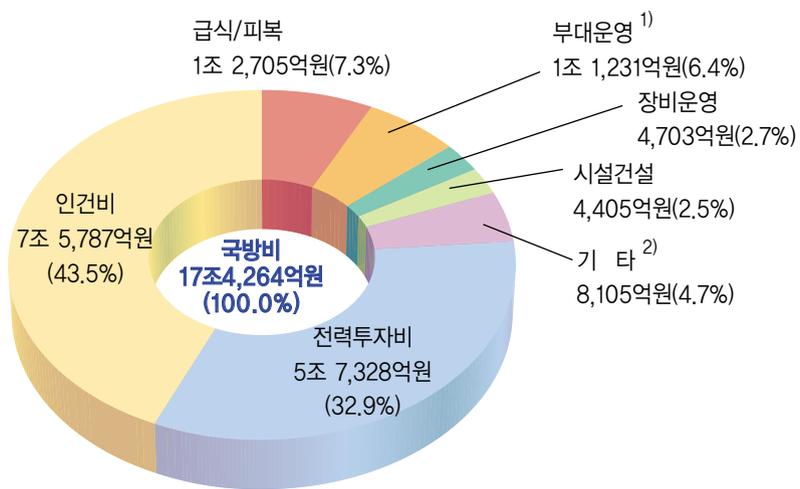
2003년도 예산에서 전력투자비는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와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경상운영비는 장병 처우향상, 병영기본시설 개선, 교육용 탄약 확보,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도표 7-1】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국방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구성비	2003년	구성비	증·감	%
계	16조 3,640	100.0	17조 4,264	100.0	1조 624	6.5
전력투자비	5조 4,756	33.5	5조 7,328	32.9	2,572	4.7
경상운영비	10조 8,884	66.5	11조 6,936	67.1	8,052	7.4
인건비	7조 104	42.8	7조 5,787	43.5	5,683	8.1
사업비	3조 8,780	23.7	4조 1,149	23.6	2,369	6.1

【도표 7-2】 2003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1) 부대운영 : 시설유지, 물자획득, 국방정보화, 주둔군지원 등

2) 기타 : 교육훈련, 예비전력관리, 연구기관운영 등

제2절 국방비 배분 추세와 국방운영의 실상

1. 국방비 배분 추세

우리의 국방비는 1960년대까지 인력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군사력 건설 및 장비유지비 등은 주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 왔다. 1960년대 말 미국의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71년) 등으로 1970년대 초부터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한 군 현대화 계획(올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975년부터 '방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필요한 국방재원을 충당하였다. 또한 1979년 GDP 6%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양국간 양해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 GDP 6% 수준의 국방비를 배분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비 확보를 위해 GDP 대비 일정비율 적용개념에 의한 국방비 규모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한 국방비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방비는 GDP 4%대 수준으로 하향 배분되었다.

【도표 7-3】 국방비 배분추세



1990년대 민주화 발전과 지방자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비를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을 고려하여 편성함으로써 GDP 3%대 수준으로 더욱 하향 배분되었고, 특히 1997년 IMF 금융위기시 국방비가 대폭 감소된 이래 긴축운영기조가 현재까지 지속됨으로써 2000년대에는 2%대 수준으로 하향 배분되어 국방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국방운영의 실상

장기간 지속되어 온 국방비의 하향 배분 현상은 물가 상승, 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과 함께 국방운영 여건을 악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은 물론, 현존전력 유지마저도 곤란한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 장병 사기복지 분야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불 수준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있지만 장병 사기복지는 앞서 ‘장병복지 및 병영환경 개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방부문의 내핍운영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1960~70년대 수준으로 낙후되어 군 간부로서의 자긍심과 직업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고 신세대 장병의 병영생활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전투준비태세 분야

국방재원 부족 현상의 장기화는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수명주기가 초과된 노후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나이키 유도무기는 1966년 미 군사원조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이 운용하고 있으며, 장비노후로 인해 지난 1998년과 1999년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또한 장비유지비의 감소로 인해 전투긴요 장비의 정비가 지연·적체되고 있어 전투준비태세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시비축탄의 전투지속 목표 소요를 충족한 탄종은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교육용 탄약 보급률도 86%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일부 고가탄은 실제 사격훈련이 전무한 상태로 개인 및 부대의 전투기량

저하가 예상된다. 한편 유류 부족으로 기동훈련이 제한되고 있으며, 훈련장이 부족하여 야외 기동훈련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여 군 지휘관들은 민원예방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전력투자비 분야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국방부문의 긴축재정기조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방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력투자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력투자분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표 7-4】 전력투자비의 국방비 점유율 변화 추세



첫째, 매년 전력투자비 중 최소 10% 이상이 신규투자사업에 할당되어야 하나 재원 압박으로 인해 전력투자비중 신규사업 비중은 1997년 6.6%, 2003년도 3.7%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새로운 전력증강사업의 추진이 극히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K1A1 전차,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7,000톤급 구축함(KDX-Ⅲ), 차기 유도무기 등 핵심적인 전력에 대한 투자사업이 연기되거나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예를 들면, 호크·나이키 유도무기를 대체할 차기 유도무기사업은 당초 72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48기로 축소되었고, 사업 완료시기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되었다.

셋째, 국내 방위산업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방위산업체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 기준 5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장비별 최소 수준만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내방산기반의 지속 유지가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연구개발투자 부족으로 미래 전력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 지연 등 군사기술의 대외종속화와 방산수출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도표 7-5】 주요 전력증강사업 축소·연기

	최 초 계 획	조 정
K1A1 전차 7,000톤급 구축함(KDX-III)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차기 유도무기(SAM - X) 공중급유기	'99~'08년 456대	'99~'08년 323대
	'99~'08년 3척	'01~'12년 3척
	'99~'08년 120대	'02~'09년 40대
	'98~'04년 4대	'04~'10년 4대
	'99~'05년 72기	'04~'10년 48기
	'00~'05년 5대	'04~'10년 4대

제3절 걱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긍정적 견해는 남북 화해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므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권국가로서 국력에 상응한 자주국방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양보다 질 위주의 미래 지향적 선진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 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동족간의 전쟁은 없다’는 인식이 사회 일각에 확산되면서 국방비 증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며 우리의 경제력 및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므로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병력감축 등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전력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걱정 국방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상황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근거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1. 연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

북한은 남북 화해협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압도적인 양적 우위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속전속결의 군사 전략하에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을 평양~원산 선 이남에 집중 배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공격이 가능하며, 특히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대량으로 개발 보유하여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전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비경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적극 방어’ 전략기조 아래 군사력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군사위협은 물론 미래 불특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이 시급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

2. 안 · 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성 대비

최근 미국은 세계 안보환경 변화와 및 미군 전력의 발전을 고려하여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은 지역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 주한미군의 임무 중 일부가 한국에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정보·감시, 정밀타격, 방호전력 등 미군에 의존하던 전력을 가급적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자위적 방위역량 기반을 구축해 나아감과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력에 상응하는 국방력 확보

경제력과 군사력은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양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국방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므로 국력에 상응하는 국방비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는 냉전종식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듯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9·11 테러 이후 국방비의 급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GDP대비 국방비 부담률 2.7%는 세계 평균 3.5%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만 등 분쟁국·대치국의 평균 부담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 1인당 국방비도 2001년 기준 252불로서 세계 30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GDP기준 세계 13위의 우리 나라 경제력을 고려시 세계 평균 수준인 GDP대비 3.5~4%의 국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도표 7-6】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

(2001년 기준)

구 분	이스라엘	미 국	싱가포르	프랑스	대만	러시아	일 본	한 국
국방비(백만 \$)	10,375	322,365	4,280	32,909	10,432	63,684	39,513	11,920
GDP대비 (%)	9.5	3.2	5.1	2.6	3.7	4.3	1.0	2.8
국민 1인당 국방비(\$)	1,673	1,128	1,044	553	472	440	310	252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4. 국방비와 국가발전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으로서 튼튼한 안보는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은 다시 적정 국방비의 지출로 이어져 국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정보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정보, 자본, 재화가 신속히 유통되는 새로운 시장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하에서 안보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국가신인도 하락, 투자심리 위축, 주가 폭락,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안보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안보 및 국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 우리 나라는 GDP대비 국방비 6% 수준을 지출하면서도 연평균 15~20%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바 있다. 국방비의 산업생산 유발효과는 산업평균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국방관련기술의 민간이전과 무기 해외도입시 절충교역 등을 통하여 국내기술 발전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국방비는 단순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부문으로 지출되어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유엔 PKO활동과 대테러전 참전으로 국가위상의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미관계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군은 재해, 재난 및 대규모 국가행사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4절 자주적 선진국방을 위한 소요

참여정부 기간동안 「자주적 선진국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유지와 전력투자 소요에 부가하여 국방분야의 장기간 내핍운영에 따른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와 자위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보를 위한 소요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장병 사기복지 개선을 위한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 간부 숙소개선, 병사 봉급 인상 및 시설유지비 현실화 등에 필요한 약 10.4조원의 예산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보강 및 부서관 증원을 위한 재원 약 1.8조원을 포함하여 2008년까지 12.2조원의 국방재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전투준비태세 보강을 위한 교육용탄약, 장비연료, 훈련장 확보에 3.4조원,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제 비용으로 0.3조원이 소요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상운영비 총 소요는 82조원으로 판단된다.

자위적 방위역량의 조기확보를 위한 전력투자사업은 북한위협 대응능력 우선 완비,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대응능력 발전,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약 5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2004~2008년 기간 중 경상운영비와 전력투자비를 합친 총 국방비 소요는 137조원이며, 이는 기간중 예상 GDP 대비 3.2~3.5% 수준에 해당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병력감축 등 경제적인 운용을 통하여 전력투자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군은 내핍 운영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 그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F-15K 전투기 1대의 가격이 2개 사단의 연간 운영비에 해당하는 1,000억원 수준이며, 한국형 구축함(KDX-Ⅲ) 1척의 가격은 17개 사단의 연간 운영비에 해당하는 1조 5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국방비 하향배분에 따른 전력투자비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국방의 핵심은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적기(適期)에 투자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확보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하는 데 있다. 급변하는 21세기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미래를 대비한 국방력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미래의 국가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재원 부족 현상이 장기간 누적되어 군사력 건설과 유지 모두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평화번영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장차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자주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기충천한 선진 정예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GDP 3.2~3.5% 수준의 국방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권과 이익을 수호하려면 국민들의 강력한 안보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계에 달한 국방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배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제8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

제1절 국민편익 증진과 권익보호

제2절 열린 국방 구현

제1절 국민편익 증진과 권익보호

1. 군 환경보전활동 강화

가 .

‘환경친화적 군 관리’는 군 환경정책의 기본목표이다. 군 주둔과 운용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며,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환경관리는 모든 인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우리 군은 오·폐수 처리시설 등 6종 5,412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중 2002년말까지 64%인 3,460개소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952개소는 200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된 환경시설개선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소각시설 등 11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표 8-1】 환경기초시설 확보 현황/계획

구 분	총소요	'02	'03	'04	'05
개 소	5,412	3,460	440	756	756
억 원	4,919	2,400	498	1,011	1,010

또한, 군 환경시설운용 및 주둔지 환경관리 효율화를 위해 환경특기병 및 전담요원 등 환경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02년까지 896명의 전담인력을 확충한 바 있으며, 총 소요 1,609명을 환경시설 설치계획에 맞추어 200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도표 8-2】 환경전담인력 확충 실적/계획

구 분	총소요	'02	'03	'04	'05
인력(명)	1,609	896	237	237	239

나.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 강구

우리 군은 다수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을 유지·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 비행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 항로 및 고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는 등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소음 방지를 위해 2002년까지 방음정비고 7개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2005년까지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소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 중인 소음실태조사를 2004년까지 완료하고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200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군 시설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

가. 군용시설 이전 추진

1966년부터 2002년까지 총 3조 6,409억원을 투자하여 234개 부대를 이전하였으며, 2003년에는 3,270억원의 예산을 들여 36개 부대를 이전할 계획이다.

【도표 8-3】 군용시설 이전 현황

(단위 : 부대)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인천	기타
총사업('66-'02) (2002년도)	234 (7)	55 (1)	43 (0)	20 (0)	20 (0)	19 (1)	23 (0)	10 (0)	44 (5)

나. 군 사용 사유지 정리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는 매수·보상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표 8-4】 군 사용 사유지 정리 현황

구 분	총대상	기정리 (1983~2002)	정리계획	
			2003	2004이후
대상토지(만평)	4,702	3,681	277	744
소요예산(억원)	6,934	4,520	614	1,800

다.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기지)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기지) 보호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접경지역과 주요 군사시설(기지) 주변지역에 32억 4천여 만평을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 작전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법령 및 제도 개선

군사시설(기지) 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는 1970년부터 제정되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민통선 북방 취락지역과 통일정책 관련 사업지역, 안보관광단지 등 일부 부지역에 대하여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탄약고 보호구역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신·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철도 및 도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택이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할 경우에는 건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비행장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km까지 설정되었던 지원항공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을 2km로 축소하였으며, 헬기 전용 작전기지도 축소 조정하여 항공기지 주변의 규제 범위를 완화하였다.

1998년 2월부터는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내 각종 건축 허용높이를 명시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군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도’를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이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였다.

2003년 5월 15일에는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6870호로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관할부대, 즉 사단 및 여단급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협의업무의 위탁 및 기타 군사시설(기지)보호업무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행정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방 행정기관과 관할부대간 원활한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합리적인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 관리와 국회청원,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합참 작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개선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보호구역 각종 규제완화, 보호구역 해제 및 설정·변경 등의 재조정과 작전성 검토기준 재정립,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 3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개선’을 국방부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규제 완화

1997년 10월에는 탄약고 및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취락지역 등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3개 지역 50만평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였으며, 민통선내 정착촌 및 안보관광단지 조성지역과 후방 방공포기지 등 12개 지역 482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수도권 개발지역 등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10개 지역 381만평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였고, 민통선내 취락마을 16개 지역 23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건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경기, 강원, 인천, 서울 등의 3억 2천만평에 대한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였으며, 1999년 11월에는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일대의 32개 지역 1,500만평에 대한 협의업무를 건축고도 5.5~45m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00년 9월에는 도시형성 및 부대이전 등으로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3개 지역 106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파주시 동패리 정착촌 및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역의 6만 4천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과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작전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강화도, 문산, 창원 지역 등 36개 지역 4,26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파주, 고성, 마산, 진해지

역 등 34개 지역 372만평의 협의업무를 건축고도 3~70m 범위내에서 군과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지역주민 편익과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2002년 9월에는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고도를 완화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등 25개지역 55만평을 해제하고, 민통선 북방 서북 5개 도서지역을 포함한 취락마을 75개 지역 216만평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건물 신축과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양시 벽제동과 파주시 신산리 등 33개 지역 308만평은 행정기관에 협의업무를 위탁하여 군과 협의절차를 생략하게 하였으며 기존 위탁지역은 건축 제한고도를 완화하였다.

【도표 8-5】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 해제·완화 실적

(단위 : 만평)

연도	계	'80이전	'81~'85	'86~'88	'89~'93	'94	'95~'98	'99~'00	'01~'02
해제	92,776	849	1,104	30,805	1,393	53,770	431	106	4,318
변경	10,005	257	486	2,615	1,419	4,267	715	6	240
협의위탁	33,632	·	·	·	·	·	32,000	1,500	132

3. 군의대민지원 활동

가. 대민지원 사업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같이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본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이 보유한 인력, 장비 및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적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모내기, 벼베기 등 각종 농촌일손돕



영농지원

기 작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단순한 인력지원 보다는 농로정비, 하천개·보수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과 경운기, 이앙기 등 농기계수리 봉사단을 편성하여 농기계 서비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는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도표 8-6】 2002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참여인원	동원장비	주요 지원 실적				
		영농지원	농기계수리	농로보수	방역활동	의료지원
613,901명	9,105대	28,752정보	6,591대	89km	1,384개소	24,874명

한편, 군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과 ‘1부대 1개이상 자매결연 맺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대민 무료 법률상담도 수행하고 있다.

나. 국책사업 지원 활동

군은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정리사업 등 국토개발에 계속 참여하여 왔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자유로 노반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1996년에는 백령도, 대청도 도로 개선공사를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강화도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19km구간의 노반 조성공사를 지원하였고, 2단계 공사로서 2000년 6월부터는 9.5km구간에 대해 병력과 각종 토공장비를 지원하여 2002년말까지 4.3km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군의 지원으로 그 동안 약 173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군 작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재해·재난 지원 활동

2002년도에는 폭설, 가뭄, 적조, 호우 및 태풍 「루사」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의 재해가 있었다.

군은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마다 가용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대민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용능력을 총동원하여 「군 기본임무 수행」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재난에 대비한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위기 관리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8-7】 최근 5년간 대민지원 실적

구 분	계	'98	'99	'00	'01	'02
병력(명)	6,670,546	1,875,540	1,446,651	522,309	1,843,986	982,060
장비(대)	149,482	35,476	20,452	3,790	66,892	22,872

【도표 8-8】 최근 5년간 주요 대민지원 내용

구 분	인명구조 (명)	가옥정리 (동)	도로/제방 복구(km)	농경지복구 (만평)	방역/소독 (ha)	하우스/축사 복구(동)	황토살포 (톤)
계	1,674	77,158	9,388	2,117	161,333	36,867	9,305
'98	861	6,520	922	42	132,678		
'99	578	21,071	1,020	1,429	22,274		
'00	-	1,493	66	-	5,927		
'01	124	36,252	6,813	62	-	36,867	5,705
'02	111	11,822	567	584	454		3,600

라. 국가적 물류대란 관련 군 지원(화물연대 파업)

2003년도 5월 화물연대 총파업(5.12~5.15)으로 인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되고 수출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신용도의 하락이 우려되는 국가적 물류대란 기간 중에도 우리 군은 군 전문인력과 장비를 적시적소에 지원하여 부산항만과 전국 물류수송체계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일반적 대민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란시에도 국민의 군대로서의 신뢰받는 군 본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요원 35명과 69톤 트랙터 및 컨테이너 트레일러 각 20대와 인원 40명을 지원하는 등 총 인력 230명과 수송장비 92여 대를

지원하여 전국 물류정상화에 기여하는 한편, 부산항의 군 전용부두를 민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철도, 전력, 수도 등 12개 분야 기간산업요원 10,860명을 양성하여 상시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시 수송장비 지원

제2절 열린 국방 구현

1.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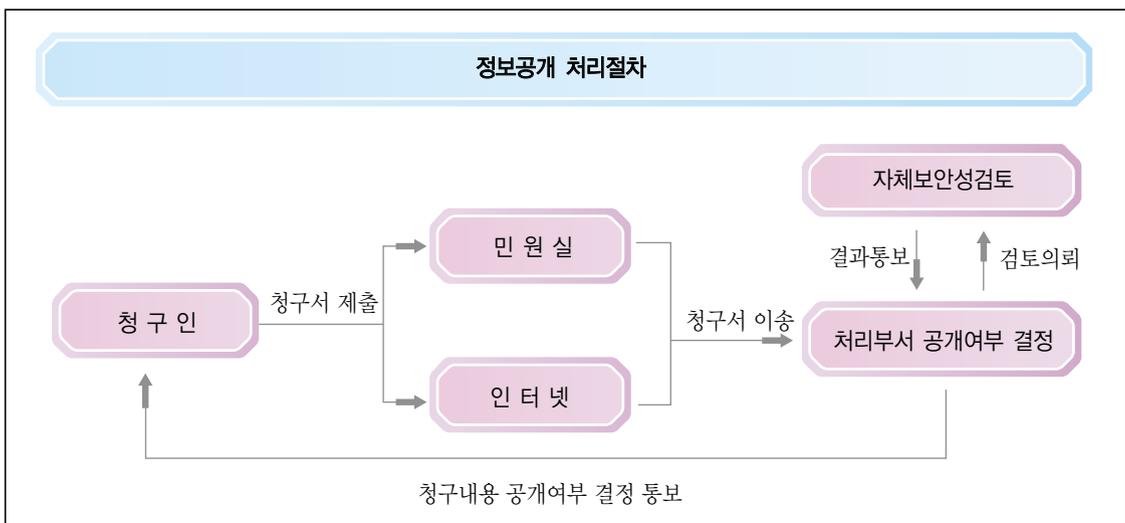
가. 정보공개와 국방민원

‘국방의 원천은 국민이며, 군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없이는 국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대군 신뢰증진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방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군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열린 국방’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 정보공개

정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원실에

【도표 8-9】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목록을 비치하고 정보공개 청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구축하고 국방관련 각종 정책자료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정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보공개절차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게재된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 문서목록 등의 각종 정보를 열람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는 15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국방부와 예하 기관은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방부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통계자료, 정책자료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전력투자사업과 관련한 비밀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1999년 7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실적은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1998년에는 공개청구건수가 5건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보공개 욕구의 증대로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표 8-10】 정보공개 현황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5월)
건 수	34	627	2,204	139	113

※ 2002년 정보공개현황이 줄어든 것은 단순 정보공개는 일반민원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이 청구하는 정보의 공개수단을 확대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국방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신뢰와 사랑을 받는 새로운 국민의 국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 국방민원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보장의식 고양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욕구증대로 인하여 국방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원업무 처리는 민원을 단순히 접수 후 이첩하는 문서반 기능만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민원해결이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국민 민원처리 만족도를 위해서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처리부서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서전달 체계로 이송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도표 8-11】 민원신청 방법

신청구분	전화번호 및 주소
국방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
민원상담전화	02)748-6891, 6892, 797-7504, 795-0808
F A X	02)748-6895
인 터 넷	www.mnd.go.kr(열린국방, 국방신고센터)
국방신고센터	02)748-5959, 017-675-5959, 017-674-6880
국방부대표전화	02)748-1111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각종 민원내용을 종합적이고 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민원업무는 단지 문서를 전달하거나 이첩하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기능을 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대민과 관련된 업무와 역할이 중요시 됨에 따라 감사 및 국방신고센터 기능을 보강한 민원과를 감사관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직접 민원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처리가 지연되었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하였고,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국방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민원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국방민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문서 이첩기간을 7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민원관리는 물론 민원인이 민원처리상황을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신뢰성·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숙원 민원이나 미해결 민원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개정토록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법령상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을 고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채택함으로써 민원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넷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편리하도록 국방부 본부 및 각군본부 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민원감사, 매년 1회 대국민 만족도 조사, 사단급 이상 주요부대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보완하고 있다.

다섯째, 군내에서 발생하는 구타사고 및 각종 비리를 근절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을 정착시키고자 국방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방신고센터 이용안내를 국방일보에 매주 1회씩 홍보하고, 신고접수를 인터넷, 우편, 전화, FAX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24시간 접수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제보내용 중 중요사항은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은 각군에 이첩·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군내 각종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타, 가혹행위나 비위·부조리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 8-12】 국방부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년 도	계	서류민원	인터넷 민원	방문 민원	전화상담
2000	51,274	3,793	8,834	2,622	36,025
2001	55,922	3,234	10,666	1,832	40,190
2002	66,763	9,319	13,216	3,028	41,200

국방에 관련된 주요 민원유형은 개인신상·제도개선, 전·공상 및 상훈 사실확인, 재산권 보장, 사건 및 사고 등이 있으며 민원 제기방법에 있어서도 정보화 추세에 따라 서류보다는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서는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의 방대함과 비밀업무 수행 등 국방업무의 특성상 아직도 민원인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터넷처리 부대 확대, 민원처리기

간 단축 등 각종 민원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 등 민원서비스 형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나. 국방홍보업무 활성화

국방정책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국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일 프레스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방소식 등 군 홍보매체를 통해 주요 국방정책 추진상황 및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적시에 알려주고 있다.

2000년 3월부터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 내에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각군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종 군사자료는 물론 군가, 군 영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열린 게시판, 전자우편(E-mail)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방정책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홍보매체인 국방일보의 신속한 배달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일간신문 배달체계를 이용하여 발행당일 구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정책 홍보와 장병가족의 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서울 지하철 일부구간에서, 2002년 10월부터는 부산 지하철 구간에서 유료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자의 반응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일보 가두판매

다. 병영체험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

우리 군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지도력 배양, 잠재능력 계발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호국병영체험 및 극기훈련 활동 등을 각군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매년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국방소개 영화, 기초 군사훈련, 야간 전방경계 체험, 내무 생활 교육, 해양 활동, 서바이벌 게임, 생존 야영 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체험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와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민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입대 전에 사회활동과 병영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군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병영체험을 기회로 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에 부합된 병영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나아가 범 국가적 건전문화의 확산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 병영 체험

【도표 8-13】 2002년도 청소년단체 호국수련 지원실적

(단위 : 명)

총 인원	한국청소년연맹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우주정보소년단연맹	해양소년단연맹	기타
101,890	35,570	38,000	5,450	7,000	13,880	1,990

한편, 기성인들에게는 이러한 병영체험을 통하여 과거 근무했던 부대에 대한 향수와 자긍심을 높이고 안보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방부는 매년 사계전문가를 비롯 시민사회단체(NGO)와 문인협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전방부대에 초청하여 군의 경계태세 확인과 안보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방정책 발전에 민간전문가 참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의 시대에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981년부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민·군간 상호이해와 공감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국방정책에 대해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정책, 군비통제, 정훈·공보, 기획·예산, 법무, 인사·복지, 동원, 군수, 획득, 연구개발, 시설, 정보체계, 합참 등 13개 분과위원회에 총 47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2001년부터 여성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10명의 여성자문위원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자문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되는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 현안문제 발생시에는 개별 방문 또는 서신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나. 민간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과거 민간 전문가의 국방정책 결정 참여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1998년도부터는 민간인 사계전문가들을 각종 심의위원회 등에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2003년도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국방연구위원회’로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예비역 전문위원들이 자문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학자들이 국방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국방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관련분야 정책 검토와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왔던 국방문제에 대한 연구를 1999년도부터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하고 있다.

3.6 · 25전쟁과 50주년 기념사업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러시아(구 소련)와 중국(구 중공)의 지원하에 기습 남침공격을 해 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 세력의 세계적화 의도를 저지한 냉전체제 하에서의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당시 유엔군으로는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인도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고, 20여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전쟁기간 중 400만여 명의 인명피해와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 230억 달러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전쟁으로 오늘날까지 민족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가.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 계승

6·25 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게 계승시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2000년 4월과 7월에 미국 등 세계각국의 관련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방학술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중앙기념행사와 전적지별 전투기념행사를 실시하며, 6·25전쟁사 중에서 미정립된 군사분야 16개 과제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분야 13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2003년까지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의 영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영천대첩기념비’,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을 2002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전쟁기념관내 ‘6·25전쟁 조형물’은 2003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667개 전적지를 정비하고 정화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 와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전투 기념행사

전쟁시 주요전투상황과 전적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역사적 교훈으로 계승하며,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며 지원우방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전투 기념행사를 치루고 있다. 낙동강 반격, 인천 상륙, 서울 수복 행사 등 33차례의 주요전투 기념행사를 치루었으며, 2003년 7월 27일에는 국방부와 UN군사령부 주관으로 판문점과 전쟁기념관에서 '정전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다.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 확대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호국영령 중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주요 격전지인 영천, 진천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유해 발굴사업을 전개하여 2003년 6월까지 총 933구의 유해와 32,000여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 중 신원확인이 안된 국군유해는 국립묘지 납골당에 안치하였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미군 유해 5구는 미국에 인계하였고, 북한군 유해 95구와 중국군 유해 19구는 파주시 적성면 소재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에 안장하였다. 또한, 향후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시 비무장지대(DMZ) 및 북한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을 위하여 6·25전쟁 참전자 중 북한지역 전투참가자와 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사자 유해소재지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증언집을 발간하였다.

유해 발굴사업은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가 종료되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이 해체되더라도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참전용사지원법률및시행령'을 개정하여 70세 이상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비 감면혜택 및 국립묘지 안장요건을 완화하여 참전자 및 배우자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사망자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유가족에게는 전사 및 순직 사실을 통보하고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마을별·학교별 전사자 및 무공수훈자 명비 제작, 도로 표지판에 참전무공수훈자 이름넣기, 참전용사의 집 문패달기, 참전용사 명예졸업장 수여, 출신모교에 참전용사 및 호국인물 흉상제작, 참전용사 위로방문, 참전전우 찾기 및

전쟁영웅 현양행사 등 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0년 6월에는 국내외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에게 6·25전쟁 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로 참전에 대한 감사표시가 담긴 대통령 감사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주소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미국은 자국 내 언론매체를 통해 대상자 확인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전후세대 호국안보의식 고취

국민의 70%가 넘는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투철한 호국안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용 프로그램과 교보재를 개발하고 각종 호국문예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6·25전쟁의 참상, 이산가족 등의 내용을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개정·반영하였고, 6·25전쟁 순회 사진전 및 DMZ 특별기획전을 실시하여 45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그 외에 통일을 위한 호국순례 대행진, 청소년 병영체험 캠프 등을 통하여 전후세대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마. 참전국과의 유대강화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함께 싸워준 우방국과 우방국의 참전용사 및 가족에게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참전 우방국과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6·25전쟁 기념 행사에 참전국 대표 및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참전국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국에서 실시하는 한국전 전몰용사 추도식 등 주요 기념행사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를 참석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6·25전쟁 전몰용사 추도식 및 캐나다 참전기념행사에 한국정부가 참석하여 참전국간의 유대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6·25전쟁 당시 한국정부는 참



6·25 참전용사 한국 방문 기념행사

전국 용사에게 6·25전쟁 종군기장을 수여하였으나, 당시 자국 내 국내법 제약으로 6·25전쟁 종군기장을 수여치 못한 미국과 영연방 일부국가 중 수여가 가능한 미국과 뉴질랜드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에게 종군기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대통령 감사서한과 병행하여 전달함으로서 한국 정부의 보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참전국 내 기념물 건립비용 지원 등과 함께 미국과 참전국의 전몰용사 추도식과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 기념식, 21개국 1,430명의 일반 외국 참전용사 방한 지원 등의 기념행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참전용사 및 가족초청 위로행사, 재외 공관을 통한 기념행사 지원은 물론 해외 주요 언론사에 한국 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해외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전국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

부



부록 1

2002년 세계 분쟁 현황

■ 분쟁의 지역 단계별 분포 : 진행분쟁 84, 종료분쟁 17(2002년 11월말 기준)

지역	총 돌 분쟁	대립 분쟁	잠재 분쟁	소계	종료 분쟁
미주 (9)				4	(97) (96) (94) (97) - (99)
아프리카 (34)	DR	- - -	R	26	(97) (96) (97) (97) (97) (94) - (94) (00)
중동 (13)	. - () -	- UAE - 가 -	- -	12	(94)
아시아 (20)	가 -	/ - -		19	- (97)
CIS (10)	-	- - -		9	(97)
유럽 (15)		-	가	14	(98)
전체 (101)	(36) 34	(33) 35	15	84	
	: 69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 분쟁의 양상과 전망' (www.kida.re.kr)

부록 2

남북 군사력 비교

2002. 12. 31.

구분		한 국	북 한		
표		69 1	117		
		56	100		
		6 8 ()	6		
		6 3	11		
주요 전력	지상군	()	13 19 (,) ,		
			49	69	
			19	67 (50)	
			2,400	3,700	
			2,400	2,100	
			5,000	10,000	
		/	200	4,400	
			20 ()	50 ()	
		해 군		130	430
				10	420
			10	30	
			20	30	
	()		10	100	
	공 군		550	830	
			70 ()	30	
			210	520	
			700 (. .)	330	
	()		380 (,)	748 (,) ,	

부록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및 능력

■ 미사일 개발 경과

- '76년, 이집트에서 소련제 SCUD-B(2기) 도입, 중국 기술지원하 개발착수
- '84 / '86년, SCUD-B / SCUD-C 시험발사 성공
- '93. 5월, 노동 1호 시험발사 성공
- '98. 8월,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성공
- '99. 9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중,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사례
 - '99. 9.24, 미·북 고위급회담 타결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
 - '00.10.25, 美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방북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재선언 언급
(※ 시험발사 유예시한 최초 언급)
 - '02. 9.17, 김정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 정상회담시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지속" 의사 표명
 -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중단 경고 사례
 - '03. 1.11, 진수 주중 북한대사 "미국이 북·미간 모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

■ 북한 미사일 성능 및 위협범위

구 분	SCUD		노 동	대포동1호	대포동2호
	B	C			
최대사거리 (km)	300	500	1,300	2,000	6,000 ()
위협범위				/	
탄두중량 (kg)	1,000	770	700	500~700	650~1,000
명중오차 (m)	1,000	1,300	5,000	2,500	2,000~5,300 ()

부록 4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 한·미 연합연습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을지포커스렌즈 (UFL)연습		5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 . • . • .
연합전시지원 (RSOI)연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NS) • / • • (COB)
독수리 (Fool Eagle)연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FTX FTX

■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압록강연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호국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한반도 주변의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 기	참 가 규 모	훈 련 내 용
환태평양훈련 (RIMPAC)	5 7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8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Pacific Reach)		, , , , ,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록 5

한·미 군사관계 일지

연도	일자	주요내용
1945	9. 7	• ,
	11. 13	•
1948	8. 15	• ,
	8. 24	• •
	9. 1	• (PMAG)
1949	3. 22	• NSC, '49.6.30 (NSC 8/2)
	7. 1	• (KMAG)
1950	1. 26	• •
	7. 9	• 8
	7. 14	• ,
	9. 15	• ,
1951	5. 17	• NSC, (NSC 48/5)
	8. 17	•
1953	10. 1	• •
	8. 12	• • ,
1954	11. 18	• •
	11. 23	• • ,
1955	1. 14	• • , 3
	1. 28	• •
	6. 21	• • ()
1956	12. 2	• • ()
1957	3. 24	• • ()
	7. 1	• ,
	12. 29	• • , (63)
1958	2. 19	•

연도	일자	주요내용
1959	5. 5	• •
1961	4. 18	•
	5. 26	• 가 ,
	8. 19	• • ()
	10.13	• • (8)
1962	3. 17	• • ()
	4. 13	• • ()
	5. 1	• • (가)
1964	12. 19	•
1965	1. 26	• ,
	6. 28	• • ()
	9. 6	• (駐越) •
1966	6. 22	• • (),
	7. 9	• • (SOFA) ,
1967	9. 5	• • ()
1968	5. 7	• 1 • ()
	10. 13	• 1
	10. 15	• • ,
1969	3. 16	• •
	7. 22	• • ()
1970	5. 26	• • ()
	10. 14	• • ,
1971	3. 12	• , 2 , JSA外
	3. 27	• 7
	4. 1	• , (JUSMAG-K)
	7. 1	• • 1
	7. 13	• • , (SCM) ()
1973	9. 13	• 6 • ()

연도	일자	주요내용
1974	9. 24	• 7 • ()
	11.22	• • (美, 對韓)
	12. 12	• ,
1975	5. 5	• (), ()
	8. 27	• 8 • ()
1976	5. 26	• 9 • ()
	6. 7	• 1 •
1977	5. 11	• • ,
	7. 20	• 10 • ()
1978	7. 6	• •
	7. 27	• 11 • ()
	7. 28	• • 1
	11. 7	• •
1979	7. 20	• ,
	10.19	• 12 • ()
1980	3. 14	• • 1 • (CFA)
1981	1. 3	• • (14)
	4. 30	• 13 • ()
	6. 19	• • ()
1982	3. 31	• 14 • ()
1983	4. 15	• 15 • ()
	12. 8	• • 155
1984	5. 10	• 16 • ()/ •
	6. 25	• • WRSA
1985	2. 15	• , •
	5. 8	• 17 • ()
1986	4. 3	• 18 • ()
	12. 16	• , '87 對韓 (FMS)

연도	일자	주요내용
1987	5. 7	• 19 ()
1988	4. 29	• ,
	6. 8	• • / •
	6. 9	• 20 ()
1989	7. 18	• •
	7. 19	• 21 ()
	8. 2	• , • 가 •
1990	2. 15	• •
	6. 25	• '96 • •
	11. 15	• 22 ()
1991	1. 25	• JUSMAG-K
	2. 1	• • 1
	3. 25	•
	11. 21	• 23 () •
1992	4. 24	•
	6. 25	• •
	8. 20	• ,
	10. 8	• 24 ()
1993	11. 4	• 25 ()
1994	10. 6	• 26 SCM (),
1995	11. 3	• 27 ()
1996	4. 16	• • (RSOI)
	11. 1	• 28 ()
1997	12. 9	• 4 1 , 29 • ()
1998	7. 9	• •
1999	1. 15	• 30 SCM (), '99 '01
	1. 17	• 30 ()
	7. 29	• •

연도	일자	주요내용
1999	11. 3	• 31 ()
2000	3. 18	• •
	6. 13	• /
	8. 18	•
	9. 21	• 32 ()
	9. 25	• (9.25-9.26,)
	2001	1. 12
1. 16		• • , (New Guideline)
1. 18		• • 2 (7)
11. 15		• 33 SCM (), (LPP)
2002	3. 29	• (LPP)
	4. 4	• 02- 04
	12. 5	• 34 SCM (), • (SOFA)
2003	4. 8	• 「 . 」1
	6. 4	• 「 . 」 2 (6.4~5)
	6.27	• • ()

부록 6

제 34차 SCM 공동성명(2002. 12. 5, 워싱턴)

1.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02년 12월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이준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인 이남신 대장과 리차드 마이어스 대장은 2002년 12월 4일 제2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주재하였다.
2. 이 장관은 ‘항구적 자유작전’과 세계적인 대테러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반수단을 사용하는 테러집단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수단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또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국가재건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3.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6월 2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슬픔과 유감을 표하고, 훈련중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거듭 다짐하였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을 위한 훈련여건 개선과 보다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관계의 당사국들이 자국민들에게 동맹의 가치를 보다 잘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양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동맹 군사능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한국방위 공약과 한국에 대한 핵 우산제공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에서의 연합방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 기술 및 과학의 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5. 이 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은 지역 및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며, 이는 미·북 기본합의(AF),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러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 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고 모든 국제적 의무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역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간의 일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6. 양 장관은 북한이 한·미 공동이익에 대해 어디에서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경제가 피해를 주고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요 무기체계의 생산 및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럽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포병을 대량 집중배치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재래식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화생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일관된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전협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9. 이 장관과 럽스펠드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미 동맹이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을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부는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차원의 협의를 실시할 것이다.
10. 럽스펠드 장관은 부대방호를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며 한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된 발전을 증진하는 한편, 주한미군 전력구조를 지속시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합하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을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11. 이 장관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였으며, 럽스펠드 장관은 이 장관의 설명을 주의깊게 경청하였다.
12. 양국 대표단은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제24차 군사위원회회의(MCM)가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동맹관계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였다.

부록 7

대외 군사교류협력 일지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2002. 1.16~ 19	4 韓·佛	
1.20~ 27	中	
1.21~ 25		韓·日 對
1.21~ 26		訪中
1.28~2. 1		가 訪日
2. 3~ 6		韓·日
2. 5	7 韓·佛	
2.16~ 19		
2.17~ 20	日	
2.28~3. 9		訪中
3. 2	日	
3. 3~ 7		訪中
3. 4	1 韓·	
3. 4~ 7	日	
3.10~ 13	日	
3.11~ 15	日	
3.18~ 23	對 가(4)	
3.19~ 22		
3.19~ 24	中	
3.24~ 28		
3.25~ 29	日	
3.27		
4. 1~ 4		
4. 7~ 12		印尼
4. 9~ 20		
4.14~ 17		
4.14~ 20		
4.17~ 26		
4.18~ 28	中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2002. 4.19 ~ 21	日 (4.20)	
4.21 ~ 28		訪中
4.24 ~ 5.4		, . .
4.27 ~ 5.3		
4.27 ~ 5.7	中	
4.29 ~ 5.2	日 (44), (2)	
5. 8 ~ 11	訪韓()	
5.13 ~ 16	4 韓·英	
5.12 ~ 14		韓·美·日
5.14	12 韓·日	
5.15 ~ 19	韓·	
5.12 ~ 20		.
5.19 ~ 23		
5.26 ~ 6.1	2	
6. 3 ~ 7	軍 (DPSD)	
6.10 ~ 15	7 韓·中	
6.11 ~ 15		韓·
6.17 ~ 21	軍	
6.17 ~ 22		訪中
6.18 ~ 23		
7. 7 ~ 9	英	
7.23 ~ 28	中 ()	
8.26 ~ 31		訪中
8.28 ~ 9. 3		韓·
8.31 ~ 9. 6		
9. 2 ~ 4		訪日
9. 2 ~ 6	韓·	
9. 9 ~ 15	韓·日 ,	
9. 9 ~ 15		AWC 訪中
9. 9 ~ 15		訪中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2002. 9.24 25	韓·日	
9.24 28		
9.30 10. 4	軍	
10. 3 6	日	
10. 8 12		
10. 8 15		訪日
10.13 16	佛	
10.13 18	韓·	
10.17 19		韓·中·
11. 4 6		訪日
11. 6 12	佛	
11. 9 13	佛	
11.10 13	日	
11.10 16		·日
11.15 24		訪日
11.17 21	佛	
11.17 21		
11.23 26	1 韓·	
11.24 29		
11.24 12.3		·
11.26 30	韓·	
11.28	4 韓·	
12. 4 8	軍	
12. 8 12	中	
12.10~14	(2)	
12.13~15		
12.14~17	4 韓·日 -	
2003. 1.17~20	中	
2.12~15	日	
2.13~16	日	
2.16~21		韓-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3. 1 ~ 4		
2003. 3. 4 ~ 7	中	
3.16 ~ 19	日	
3.28 ~ 30	韓 · 日 (3.29)	
4. 9 ~ 11	· (4.10)	
4.13 ~ 21		韓 ·
4.24 ~ 27		
5.11 ~ 14		日 ·
5.18 ~ 23	韓 · (5.19)	
6. 7 ~ 15		韓 · 佛 · 日

부록 8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회의/참가국

국 가 명	ARF(23개국)		NEACD (6개국)	CSCAP (21개국)
	ASEAN (10개국)	ASEAN외 참가 (13개국)		
한 국				
북 한				
미 국				
일 본				
중 국				
러 시 아				
호 주				
캐 나 다				
뉴 질 랜 드				
말 레 이 시 아				
태 국				
인 도 네 시 아				
싱 가 포 르				
필 리 핀				
베 트 남				
리 오 스				
미 얀 마				
브 루 나 이				
캄 보 디 아				
파 프 아 뉴 기 니				
인 도				
E U 의 장 국				
몽 골				

* 북한, NEACD에 2002년 10월 최초 참가(모스크바 회의)

부록 9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1996.1~2003.5)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1996.1.18~19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가
1996.4.15~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UN ·
1997.2.19~20 아일랜드 더블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997.3.6~8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UN ·
1997.3.10~1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KO · 가 PKO ·
1997.4.7~11 뉴질랜드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997.5.19~20 말레이시아 랑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SOM) · , 가 ·
1997.7.2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FMM) · 4 · /
1997.10.7~8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
1997.11.4~6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가 ·
1998.3.4~6 호주 시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 · CWC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1998.5.20 ~22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SOM) • , 4 , KEDO
1998.7.27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FMM) • / • NEASED , • 2
1998.9.1~3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1998.9.8~10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 Internet, E-mail , • /
1998.11.4~6 미국 호노룰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 가 ,
1998.11.25~27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99.3.2~5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가 , , KEDO, • , 4 , • Y2K , ,
1999.3.22~26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KO • PKO
1999.4.11~14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99.4.18~23 미국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99.5.19~2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SOM) • 가 , • , • ,
1999.7.26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FMM) • , , , • , • 1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1999.9.21~25 몽골 울란바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 21 • ARF 가 /
1999.10.19~20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1999.11.12~15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 ARF
1999.12.13~16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000.1.25~28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
2000.3.28~31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000.4.4~7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가 ,
2000.4.23~28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000.5.4~6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
2000.5.17~19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SOM) • • ARF 가
2000.7.27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FMM) • ARF 가 • CBM .
2000.9.6~8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2000.9.20 ~22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00.10.2 ~4 핀란드 헬싱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CE, OAS, ARF ARF
2000.10.18 ~20 인도 뭄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00.10.30 ~31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 가
2000.11.1 ~3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G-CBMs) Networking (, OP,)
2001.4.16 ~1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 가 / [ARF]
2001.4.18 ~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G-CBMs) /
2001.5.7 ~11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PKO
2001.5.17 ~18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M) ARF 8
2001.6.25 ~28 미국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7.25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FMM) , ARF 가 3 (ARF 2)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2001.8.7~10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KO 가 • PKO • PKO
2001.8.27~31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01.12.18~21 인도 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Counter Terrorism CBM • 「 」 (02. 8)
2002.4.22~24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Counter Terrorism 가 • (CBM) CBM • (PD) CBM/PD • (Defense Dialogue)
2002.5.16~17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 • ARF / 9 • 'CBM' ARF 9 • Counter-terrorism
2002.7.31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M) • / • Counter-terrorism / • 對 가 • () / • 가/
2002.8.28~30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work
2002.9.16~20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가 • / • 對

일 자 / 장 소	다 자 안 보 협 력 회 의
2002.9.25 ~27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002.11.19 ~22 뉴질랜드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 Counter-Terrorism 가 · (NPT, CTBT, CWC, BWC) · · 1
2002.12.4-6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2003.3.25 ~28 라오스 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G-CBMs) · NPT IAEA · (, , ,) · Counter-Terrorism 가 · / (NPT, CTBT, CWC, BWC) · · 2
2003.4.29 ~5.1 캄보디아 시엡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 · NPT IAEA · · (SARS) · Counter-Terrorism 가 · / (NPT, CTBT, CWC, BWC) · /

부록 1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 유엔 평화유지활동

2003. 6

지역		부대/인원	기간	교대	연인원	국회동의
既往 참여	소말리아	252	1993. 7 ~ 1994. 3	6	504	
		6	1993.12 ~ 1995. 2	6	12	
	앙골라	198	1995.10 ~ 1996.12	6	594	
		6	1996. 2 ~ 1997. 2	1	6	
現 참여	동티모르	250	1999.10 ~	6	3,244	
		8	2000. 1 ~	1	84	
	인·파	9	1994.11 ~	1	75	
	그루지아	7	1994.10 ~	1	41	
	서부사하라	20	1994. 9 ~	6	442	
	사이프러스	1	2002. 1 ~	1	1	

※ 참여인원 : 연인원 5,003명/현 참여인원 295명

■ 대테러전쟁

2003. 6

구분		현인원	지역	파병일	교대	연인원	국회동의
동의 부대 (96명)	바그람본부	48		02. 10	6	288	
	마나스파견대	40		02. 2	6		
	카불파견대	8		02. 8	6		
건설공병대		150		03. 2	6	150	
해군 수송지원단		163	가	01. 12	3	986	
공군 수송지원단		78		01. 12	3	472	
동맹국 협조단 (12명)	美 중부사	5		01. 11	1	11	
	美 태평양사	2		01. 11	1	6	
	CJTF-180	2		02. 7	6	4	
	쿠웨이트	3		03. 4	6	3	
참모 (4명)	美 중부사	1		02. 11	1	1	
	CJTF-180	2		02. 7	6	4	
	CJTF-HOA	1		03. 2	6	1	

※ 참여인원 : 연인원 2,601명/현 참여인원 1,178명

■ 걸프전/이라크전(2003년 5월 기준)

- 걸프전('91.1~4월) : 314명(의료지원단 154, 공군수송단 160)
- 이라크전('03.5월 ~) : 675명(건설공병지원단 575, 의료지원단 100)

부록 11

이라크전쟁 파병 현황

■ 파병추진 경과

연도	일자	주요사업
2002	11.20	1 (가 Non-Paper) · , , (,) ,
	12.27	(, Non-Paper) · , , 가 · : , 1 가 가
2003	3.13	2 (가 Non-Paper) · · : (,) WMD, 가
	3.20, 11:30	, (3.20, 05:30)
	3.20	NSC ,
	3.21	
	3.22	
	3.28~29	
	4. 2	가
	4. 4	(2.7 : 1) / 4.11 * 575 , 100
	4. 7	3 * 1 (4.3)
	4.17	(20)
	4.30	1 (326)
	5.14	2 (329)

■ 파병부대 현황 (2003년 5월 기준)

○ 인원 현황

계	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			
	소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장교	부사관	병
675명	575	62	124	389	100	38	26	36

○ 전개 지역

- 전개 위치 : 이라크 나시리아시와 탈릴공항 사이의 美 군기지(아더기지)
- 바그다드 남동쪽 320Km, 인구 41만 2천명
- 대부분 시아파 계통, 주 경제원은 농업

○ 수행 임무

- 건설공병지원단 : 도시 기간산업재건 위한 토목 및 건축공사 시행
- 의료지원단 : 지역주민 및 포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미군 및 동맹군 진료 제공

○ 전투 근무 지원

- 美 377전구지원 사령부(중부사 지구사 예하)에서 군수지원
- 경계, 급식, 급수, 숙영 시설 등 모든 군수소요에 대해 미측에서 제공

○ 예산

(:)

구분	계	수당	급식/ 피복	장비 운영	물자 획득	부대 운영	수송 요금	전력 투자
계	377	115	27	6	39	14	47	129
건설공병	317	96	23	5	21	12	47	113
의료지원	60	19	4	1	18	2	0	16

부록 12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주요 활동사항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07 (2000. 8. 24) • : 18 , 9 , 21 • : (2000. 9. 8)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5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案) • : / , , / • :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9. 19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 :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10. 12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1 (13, 4, , 2, 1), 13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11. 6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 2 (+ 2,600m) - , , , . • : , , 가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7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
2001.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8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DMZ : DMZ . : 1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 3 588 , 129 3. 13, 1 가 (187 44)
5. 21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 , CIQ()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OP : / , ,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9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 : 2 (SBS, K-TV)/ 4 (, ,)
2002.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4. 28	• · : · :
5. 1	• · :
5.30	• · : OP , 3
8. 12 ~ 8. 14	• 7 () · :
8.27 ~8.30	• 2 () · : 02. 9. 18 , 9. 18 8
9. 13 ~9. 15	• 1 () · : 7
9. 17	• 7 () · :
9. 18	• · ·
9. 19	• DMZ · : (), (/)
9.26 ~9.28	• (61)
10. 9 ~10.10	• (MK-4) : (10. 9) / (10. 10)
10.11 ~10.14	• 1 () · : , /
10.24	• CIQ() · : , , , 28
11. 2	• 「 · 」 (32)
11.18	• 2 () · : · , · ·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11. 16 ~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26), (11. 29) 가 : / MDL , / - . - .
12. 2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 : 12. 2 (, ,) : 12. 3 : 12. 4 (11. 28)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2. 9 : 26 : .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 () : 案 .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5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 : 4 * 1 () , 案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Q() (2) : : 13 : /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
12. 26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300 , :
2003. 1. 7 ~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Q 1 () CIQ 2 ()
1. 22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 : . 5 *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1. 27	• () · : , .
1. 28 ~1. 29	• 가 (16) · : ,
2. 4 ~2. 5	• 가 (24)
2. 5 ~2. 6	• / : 86 / CIQ()
2. 13	• CIQ 가 ()
2. 14	• (, CIQ)
2. 14 ~2. 16	• (29 500)
2. 18 ~2. 21	• 2003 · : (2. 18) / (2. 21) · : (2. 21)
3. 3	• (: 2 / : 3)
3. 4	• () · : , , ,
3. 10 ~3. 12	• (:) · : / 10km ,
3. 20 ~3. 22	• . (9)
3. 24 ~3. 26	• (9)
3. 21 ~4. 18	• . 1 (5km / 100m)
4. 2 ~4. 4	• / () · : 12 , 5 , 2 · : , / , (4.21 5.10, 20) / (6) -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4. 14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2) • : / • / : /
4. 21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5km) •
5. 10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 • (5.16) • 3 125 ()
5. 17 ~5. 24 / 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7) • (5.19 24) • (5.26) • 1116 -188 (), 1101 -117 ()
5. 22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 . • 4 (5.30, 31, 6.20, 21) • 8 (5.22, 6.3 5, 9 10, 18 19)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 • 6.10 • 6 / : 6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14:00~17:00 / 09:00~12:00 - : 09:00~12:00 / 14:00~17:00 • - 7 - 3 (, ,) * 10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MDL • : () • : ()/ () • : 40~50 (17 , 15 , 10) • : / , (), (, , ,) •), ()
6. 16 ~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 5 . (7), • (2) * / (6. 20~7. 17) * 2 (7. 10~19)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6. 27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 5 (7), (2) * / (6. 20~7. 10) * 2 (7. 21~30)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
7. 2 ~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 (,) · , / 가 - , - . -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2. 10	• IAEA Hans Blix , 2
2. 15	• , (2) IAEA
2. 25	• IAEA,
3. 12	• NPT (3)
5. 11	• UN IAEA NPT
6. 2	• .
~ 6. 11	• IAEA
7. 14	• . 2
~ 7. 19	•
1994. 2. 25	• . IAEA • 7 (3.3~3.12) , ()
5. 18	• IAEA, 가/
~ 5. 24	• , 5MW
5. 19	• IAEA ,
~ 6. 2	• ,
6. 6	• IAEA
~ 6. 10	
6. 13	• , IAEA ()
6. 15	• ,
6. 15	• (, 6.18)
~ 6. 18	• , • ,
6. 24	• . (Agreed Framework) • (1,000MW 2) • 50
~ 10.21	• . • .
11. 1	•
1995. 1. 18	• 5MW . ()
~ 1. 23	
3. 9	• (KEDO) () • : , , , EU(4) • : , , , , , , (7)

일 자	주 요 내 용
1995. 6. 13	• (2)
6. 20	• 5MW (8,000)
12. 15	• KEDO (18 , 4) • KEDO가 2 가 1,000MWe 가 2 () • 3 17
1996. 3. 19	• KEDO,
4. 27	• NAC International 가 5MW (Canning)
7. 11	• KEDO (, ;)
9. 18	•
1997. 1. 8	• KEDO (,)
6. 24	• KEDO ()
7. 28	• KEDO ,
1998. 8. 10	• Time (8.17),
8. 31	• 1
9. 24	• IAEA ,
11. 10	• KEDO (: 46) • : 70%(32 2) • : 10 (1,165) • : 3 8
1999. 3. 16	• • : 1 1999 5 , 2 2000 5 , 3 • : 60 ,
5. 3	• , KEDO
5. 18 ~ 5. 24	• • Joel Wit 14 • : 가 • : , 가
5. 25 ~ 5. 28	•
7. 2	• KEDO : 32.2
8. 12	• , KEDO
8. 24	• ,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9. 12	• .
9. 15	• W. Perry . 3 : () , () () . : . 가
9. 17	•
9. 25	• UN .
10. 1	• IAEA
10. 13	• CTBT
10. 23	• . .
10. 28	• KEDO, • () : (59%), (15%), (15%), (5%), (3%), (2%), (1%)
11. 3	• , 가
11. 23 ~ 11. 24	• KEDO ,
12. 15	• KEDO- (TKC)
12. 28	• , () , () KEDO
2000. 1. 22	• . , (1.28)
1. 28	• KEDO .
2. 2	• , 가
2. 3	•
4. 20	• 5 MW
5. 25 ~ 5. 27	• 2 • 1
7. 30	• KEDO · EU 가
9. 25	• , KEDO
10. 20	• KEDO .
12. 22	• (-)
12. 27	• , KEDO 가
2001. 2. 1	• , KEDO •

일 자	주 요 내 용
2001. 3. 3	• ,
3. 20	• 1 (206)
3. 22 ~3. 23	• KEDO () , T/G
3. 24	• , SSB
4. 24	• 2 (160)
5. 1 ~5. 5	• KEDO- 가 () , , , ,
5. 16	• , 가
5. 30 ~5. 31	• KEDO () ,
7. 30 ~7. 31	• KEDO ()
8. 21 ~8. 25	• KEDO - 가 ()
9. 1	• , 가
9. 12	• KEDO,
12. 3	• KEDO-
12. 10	• (EU) , KEDO 가 (2001 2005)
12. 14	• 56 ,
12. 15 ~12. 19	• IAEA , ()
12. 16 ~ 12. 30	• 20 () (3, 4 , , ,)
2002. 3. 9	• LA Times , '02.1 가 ' (NPR) ' (가 7)
3. 13	• , ' (NPR) ' ,
3. 20	• ,
4. 2	• , 9 500
4. 3	• , (KEDO)
4. 30 ~5. 4	• KEDO - 가 , .
5. 19 ~5. 20	• , . 10
6. 25	• IAEA, -IAEA 18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7. 20	• , ()- ()
7. 3 ~7. 26	• , 25 ()
8. 5	• KEDO () , KEDO
8. 7	• .
8. 13	• , , 가
8. 14	• ,
8. 29	• (), IAEA
9. 16	• , ‘ ’
10. 3 ~10. 15	• ,
10. 17	• . : initiative . : ..
10. 25	• , . 가
10. 27	• APEC . . . 3 , 가 : : . 3
11. 8 ~11. 9	• , (TCOG) . , .
11. 15	• KEDO , 12 KEDO
11. 21	• “ ‘ 1 2 ’ 가 ” (CIA) (7 8)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 . 가 . IAEA 가 . NPT · IAEA . IAEA · 「 」 . 가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 . “ 50 Ton 가 ”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AEA
1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5MWe 8 . IAEA “ ” IAEA “ ”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MWe , . , . , EU IAEA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가 ”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5MWe , , ,)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일 자	주 요 내 용
2002. 12. 27	• , (NPT) ‘ , ’
12. 30	• ,
12. 31	• (IAEA) 2 , (IAEA)
2003. 1. 6	• (IAEA) , , IAEA가
1. 10	• , (NPT)
1. 11	• ,
1. 14	• , “ (new arrangement) 가 ”
	• W. , (bold initiative) ’
1. 16	• (IAEA) , 가 가
1. 17	• ,
1. 14 ~1. 18	• (1.14 1.18) (1.14 1.17)
1. 18 ~1. 21	•
1. 24	• 9 () “ ”
1. 27 ~1. 29	• 가 , NPT 가
1. 28	• W. , “ ”
	• 가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8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 2 가 6 8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 , " "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5 6-8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 , " 가 "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 " IAEA가 "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NPT) 가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IAEA)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 13 " 가 " "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2. 26	• , 가 ,
2. 27	• (IAEA) ,
	• , ‘ ,
3. 3	• W. , “ ”
3. 5	• , W.
3. 6	• , 가
3. 7	• , “ 500kg ”
3. 9	• (IAEA) , 가
3. 12	• 가 , 5 • (EU), 10 6
3. 13	• ,
	• , “ ” .
3. 20	• , 가
3. 22	• , 3.18 22 “ 가 ” “ 가 ”
3. 25	• , “ ” , . 가
3. 28	• , “ ”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 ,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 3 ”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20 ,
4. 23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3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N , ‘ ,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 ‘ • “ 가 ” “ ”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가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가 (further steps)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tougher measures)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0~6.1 , “ () () , 8,000 가 (just about completed reprocessing 8,000 rods) ”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G8 , (If necessary other Measures)'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가 가 . , . 가 가 가 , 3 .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I .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 (TCOG) , . , -KEDO . 8
6.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가 ” “ 가 ” 5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Youngdoktong) 가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CIA) ‘ , ’

부록 14

주요 국제군비통제협약/기구

1. 핵확산 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확산 금지조약(NPT)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 NPT가 IAEA와 협력하여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12월 11일 제1차 핵확산 금지조약 회의가 개최되었다. • 1966년 18개국이 핵확산 금지조약(ENDC)에 서명했다. • 1970년 1월 8일 핵확산 금지조약이 발효되었다.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개국(2003년 6월 기준)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 • 1975년 1월 8일, 1985년 1월 8일, 1993년 3월 18일, 1993년 6월 18일, 2003년 1월 8일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5월 NPT가 5년 연장되었다. • 2000년 5월, NPT가 6년 연장되었다. • NPT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2.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은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 5월 24일, 44개국(180개국)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9월 10일, 126개국이 CTBT에 서명했다. • 52개 UN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9월 10일, 2003년 6월 16일, 1998년 9월 10일 • 5월 24일, 44개국(180개국)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3월 CTBTO() • 1999년 2001. 11 CTBT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BT가 • CTBT

3.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NPT • () • (), (), (6)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 8 "Atoms for Peace" • 1956 11 IAEA • 1957 . . . 26 IAEA • 23 (IAEA , ,) • 1970 「 」 • NPT • 1993 • 1997 가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5 (2003 6) • 1957 가 , 1974 가 1994 IAEA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 (1997) ” “ (1997) ” • IAEA 가 • 1999 IAEA / UN • 2002 46 IAEA IAEA • IAEA
<p>추진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가 , 가 , •

4. 쟁거위원회(ZC : Zangger Committee)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IAEA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3 ' Zangger 1974 8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2003 6) • 1995 10 17 가 , 가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NPT 가 , 2003 • NPT 가 (Action Plan)

5. 핵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 Group)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 3 () • 1 : / / / 43 () • 2 : 2 69 (,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978 1 , (NSG)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 (2003 6) • 1995 10 13 가 , 가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 / • 2001 NSG , , 3 NSG • 2003 NSG (5.19 23,)

6.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10) • •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 CWC • 1993 1 13 CWC (, 126) • 1997 4 29 / (OPCW) • CWC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 , 151 (2003 6) • 1997 가 , 가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998.11) • ADD OPCW (12) • 1998 11 OPCW • 2003 4 OPCW 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가 •

7. 호주 그룹(AG : Australia Group)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가 / • •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85 4 Haydon , • 1985 6 1 2 ' ' • 54 • / (1992 12)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가 (2003 6) • 1996 10 가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WC ,

8.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5 BWC 가 • . • .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 6 Geneva . , , 가 • 1970 , 가 . • 1969 , 1970 BWC 가 • 1971 12 () • 1975 3 26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8 (2003 6) • 1987 6 가 , 1987 3 가 가가 가
<p>최신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1995 BWC • 5 가 (2001.11) 9.11 BWC (6) 가 • BWC • 2001 5 • 2002 8 BW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WC • BWC 가 • .

9.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00km , 500kg /UAV / (Category) • Cat. I (stage), 300km , 500kg /UAV (Category) (propellant), / , • 7 20 • Category I : 2 • Category II : 18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가 • 「 가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70 」 • 1987 4 G-7 MTCR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가 (2003 6) 1989 , , 33 가 , , 가 가 • 2001 3 26 가 , 가
<p>최신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C) , / , MTCR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CR • MTCR

10. 미사일 국제 행동지침

(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 1 : UN • 2 : · , · (SLV) • 3 : · 가 , , · 가 • 4 : · BM SLV , / • 5 : · , Consensus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MTCR MTCR 15 (2000 10 /) • MTCR 16 (2001 9 /) • 2002 11 25 Hague 93 가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6 103 가 * , , , , , • 2002 11 25 가 , 가
<p>최신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CR • , • 2003

11.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4 • 1 : X-Ray 가 • 2 : • 3 : • 4 : • 2 () (1996.5.3) • (8g) (, ,) 가 • 9 가 (9 가) • (500m) • CCW , /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가 (2003 6) • , , , , 가 , 가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W, Explosive Remnants of Wa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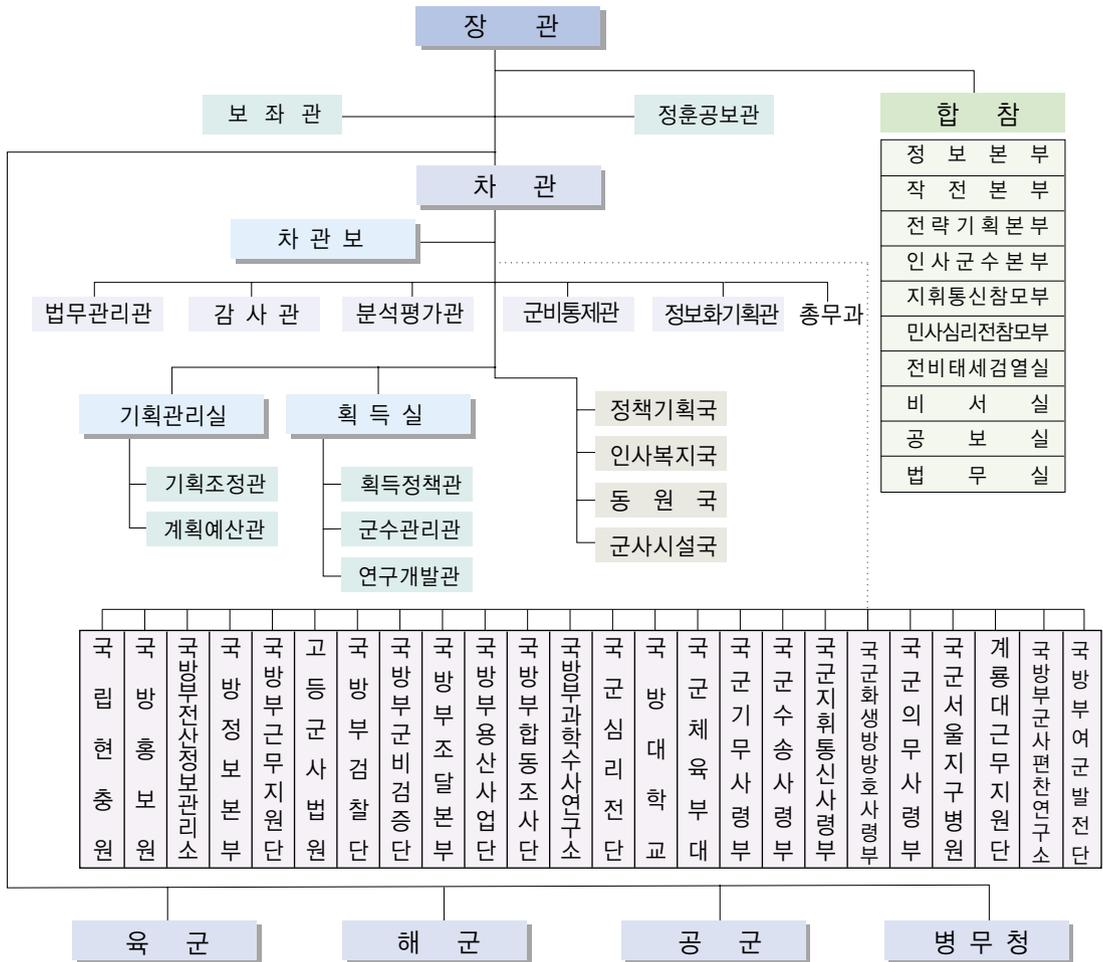
12. 바세나르 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UN • '(1992. 2) •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 , • , • ,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11, COCOM(, 1949) 17 • , COCOM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 가 (2003 6) • 1996 11 가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 2002 12) • 2003 1 1 'catch-all'

부록 15

국방기구조 및 국방인원 현황

(: 2003. 5. 31)



(:)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기 타
합 계	758,292	606,818	74,683	69,339	7,452
군 인	691,600	558,993	67,906	64,701	-
군 무 원	27,559	13,402	4,722	4,638	4,797
일반직 공무원	2,655	-	-	-	2,655
상근예비역	36,478	34,423	2,055	-	-

부록 16

2003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계획

종 류	2003년 전력화량	비 고
C4I	(SPIDER)	9 /
	VHF	216 ()
	(UAV)	4 / 2
		2
		3
·	(M/A)	18/50
	K-9	38 /
	K1A1	26 /
		10 /
·	(KDX-)	1
		1
		54
		25 /
·	(KF-16)	9 ()
	(KT-1)	19 /
		12 /

부록 17

방산관련 협정체결 현황

방산군수협력 협정	과학 기술자 및 자료 교환협정	품질 보증 협정	가격 검증 협정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영 국	영 국
프 랑 스	이 태 리	프 랑 스	독 일
이 태 리	영 국	스 페 인	
스 페 인	이 스 라 엘	스 위 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 스 라 엘		이 태 리	
태 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	
필리핀		덴마크	
루마니아		호주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독일	
독일		이 스 라 엘	
뉴질랜드		터키	
네덜란드		인니	
터키		뉴질랜드	
베네주엘라			
베트남			
호주			
20개국	5개국	17개국	3개국

※ 고딕체로 표시된 11개국은 1999년 이후 신규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임.

부록 18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 연도별 국방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국 방 비	전력투자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율(%)	
			전력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국 방 비	전력투자비
1997	137,865	48,836	3,432	1,211	4,643	3.4 (2.5)	9.5 (7.0)
1998	138,000	50,902	3,661	1,129	4,790	3.5 (2.7)	9.4 (7.2)
1999	137,490	52,304	5,960	1,051	7,011	5.1 (4.3)	13.4 (11.4)
2000	144,390	53,437	6,482	967	7,449	5.2 (4.5)	14.0 (12.1)
2001	153,884	52,141	5,888	1,027	6,915	4.5 (3.8)	13.2 (11.3)
2002	163,578	54,756	6,314	1,369	7,683	4.7 (3.9)	14.0 (11.5)
2003	174,264	57,328	6,349	1,511	7,860	4.5 (3.6)	13.7 (11.1)

※ 괄호() 속은 연구개발비중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투자비 대비 자료임

■ '04~'08 중기계획 연구개발 예산 편성

구 분	계	'04	'05	'06	'07	'08
연구개발비 (억 원)	76,040	11,255	12,888	14,781	17,188	19,928
국방비 점유율 (%)	6.3	5.4	5.8	6.1	6.6	7.2

부록 19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단 위
국 가 별							
미 국	국 방 비(A)	281,243	276,618	278,398	281,601	284,448	US \$ ()
	연구개발비(B)	37,873	37,824	38,290	37,932	39,340	
	비 율(B/A)	13.5	14.8	13.8	13.5	13.8	
영 국	국 방 비(A)	35,603	38,090	35,945	33,890	32,608	US \$ ()
	연구개발비(B)	3,632	3,938	4,067	4,026	3,986	
	비 율(B/A)	10.2	10.3	11.3	11.9	12.2	
프 랑 스	국 방 비(A)	34,031	31,942	29,497	26,538	24,257	US \$ ()
	연구개발비(B)	3,975	3,385	3,025	3,053	3,145	
	비 율(B/A)	11.7	10.6	10.3	11.5	13.0	
독 일	국 방 비(A)	28,444	27,052	25,423	22,871	20,154	US \$ ()
	연구개발비(B)	1,547	1,467	1,313	1,299	1,286	
	비 율(B/A)	5.4	5.4	5.2	5.7	6.4	
이 탈 리 아	국 방 비(A)	18,973	18,201	16,239	15,704	14,861	US \$ ()
	연구개발비(B)	781	555	310	218	291	
	비 율(B/A)	4.1	3.1	1.9	1.4	2.0	
일 본	국 방 비(A)	40,800	37,600	43,200	45,200	40,400	US \$ ()
	연구개발비(B)	1,300	1,000	1,200	1,100	1,098	
	비 율(B/A)	3.2	2.7	2.8	2.4	2.7	
러 시 아	국 방 비(A)	83,000	81,765	109,000	151,000	218,940	
	연구개발비(B)	11,574	10,800	14,000	15,600	21,894	
	비 율(B/A)	11.1	13.2	14.9	11.1	10.0	

주) 참고자료 :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기준: 1999년도 US \$)

부록 20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현황

구 분	과 제 명	비 고
총계(30개)	: 7 , : 23	
1997년도 (3개)	· ('01) · ('02) · ('02)	
1998년도 (4개)	· ('02) · / ('02) · (C) - (C) ('02) · ('02)	
1999년도 (12개)	· ATM () · / ('02) · () · / ('01) · (TWT) ('02) · DLVA ('01) · ('01) · SQUID ('01) · ('01) · ('02) · ('01) · ('02)	
2000년도 (4개)	· 3D-VR () · Blind Source Noise Cancellation () · / () · ()	
2001년도 (4개)	· () · RF NQR(4) () · / () · ()	
2002년도 (3개)	· () · () · ()	

부록 21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현황

■ 일반업체/기관에 이전한 기술('86~'03. 5월 현재/26기술, 79 업체/기관)

순서	기술명	이전 업체수	순서	기술명	이전 업체수
1	S/W	35	27	(DXD-4)	1
2		2	28	(DXD-3)	1
3	6	3	29	(H-6) KM-180	1
4		1	30	(DXD-5,6)	1
5	300	2	31	(DXD-10)	1
6	S/W	1	32	(DXD-53)	1
7	ATM	2	33	(DXD52, 56)	1
8		1	34	(DXD-57)	1
9		1	35	(DXD-59)	1
10		1	36		1
11		2	37	가	1
12	D/B	2	38	Pentolite	1
13	S/W	2	39	KDG-117()	1
14		1	40		1
15		1	41	H1	1
16		1	42	가 , , 가	1
17		1	43		1
18		2	44	, ,	1
19	,	5	45	-	2
20	S/W	1	46		2
21	, , 가 S/W	3	47		2
22		3	48	(KT-1)	1
23	HNIW	2	49	(KT-1) ,	1
24		2	50		2
25	/ 가 /	1	51		1
26	가	1	52		1

■ 방산업체에 이전한 기술('86~'03. 5월 현재/25개 기술, 28개 업체/기관)

기	술	명	업	체
(H-6)	KM-180		()	
	(DXD-3)		()	
	(DXD-4)		()	
	(DXD-5,6)		()	
	(DXD-10)		()	
	(DXD-53)		()	
	(DXD-52, 56)		()	
	(DXD-57)		()	
	(DXD-59)		()	
			()	
	가		()	
	Pentolite		()	
			() LG	
	KDG-117()		()	
	H1		()	
	가	가	()	
			()	
	,	,		
	-	(2)	() , ()	
		(2)	, ()	
	(KT-1)			
	(KT-1)	,	()	
		(2)	SDS,	
			()	

부록 22

2002년도 직업보도교육 현황

■ 총괄

(:)

계	사 설 학 원	창업·자영업
1,834	855	979

■ 사설학원과정

(:)

구 분	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상사	중사
계	855	15	146	143	232	43	196	80
육 군	809	14	140	135	225	35	185	75
해 군	38	-	4	5	7	7	10	5
공 군	8	1	2	3	-	1	1	-

■ 자영업·창업과정

(:)

구 분	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상사	중사
계	979	78	56	87	80	185	397	96
육 군	515	69	30	42	76	26	220	52
해 군	225	1	9	28	2	38	114	33
공 군	239	8	17	17	2	121	63	11

■ 기타 위탁교육과정

(:)

구 분	계	영 관	위 관	준사관	부사관
계	954	350	310	63	231
사회적응교육	520	209	90	40	181
창 업 교 육	434	141	220	23	50

2002년도 전역자 취업 현황

구 분	취업계				산 하 기 관	비 상 계 획 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복지단 근무원	일 업 반 체
	계급	전역	취업	비율(%)						
총 계		3,090	850	27.5	5	48	122	21	13	641
		189	49	25.9	2	22		6		19
		433	110	25.4	1	24		3	2	80
		652	282	43.3	2	2	96	8	2	172
		309	169	54.7			26	4		139
		286	32	11.2					1	31
		628	48	7.6					7	41
		240	41	17.1					1	40
		353	119	33.7						119
육 군		2,200	565	25.7	3	42	121	8	12	379
		119	25	21.0	1	18				6
		377	91	24.1		22		2	2	65
		494	180	36.4	2	2	96	3	2	75
		288	155	53.8			25	3		127
		114	12	10.5					1	11
		459	31	6.8					6	25
		188	26	13.8					1	25
		161	45	28.0						45
해 군		442	138	31.2	1	3	1	4	1	128
		33	14	42.4		2				12
		30	12	40.0	1	1				10
		41	18	43.9				3		15
		10	9	90.0			1	1		7
		40	6	15.0						6
		100	8	8.0					1	7
		24	7	29.2						7
		164	64	39.0						64
공 군		448	147	32.8	1	3		9		134
		37	10	27.0	1	2		6		1
		26	7	26.9		1		1		5
		117	84	71.8				2		82
		11	5	45.5						5
		132	14	10.6						14
		69	9	13.0						9
		28	8	28.6						8
		28	10	35.7						10

부록 24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2002. 12. 31.)

■ 토 지

(:)

용도별 \ 군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직 등
계	40,803	28,259	3,292	3,730	5,522
건 물 부 지	8,973	7,089	431	675	778
훈련장 부지	18,487	14,462	721	267	3,037
저장시설 부지	3,713	3,009	115	541	48
비행장 부지	2,950	297	59	1,921	673
기 타 부 지	6,680	3,402	1,966	326	986

■ 건 물

(:)

용도별 \ 군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직 등
계	1,263	972	72	121	98
병영기본	716	673	18	15	10
교 육	35	21	5	5	4
정비/보급	169	118	15	32	4
일반지원	155	66	17	45	27
군 숙 소	188	94	17	24	53

부록 25

국방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 (2000-2002년)

■ 총괄

2002. 12. 31.

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61	8	16	11	26

■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사법	6719 (2002. 8. 26)	.
군용항공기지법	6720 (2002.8.26)	45
군인사법	6748 (2002.12.5)	2
병역법	6749 (2002.12.5)	. .
군무원인사법	6784 (2002.12.18)	
군인연금법	6785 (2002.12.18)	가 2% 가
군인사법	6808 (2002.12.26)	. .
병역법	6809 (2002.12.26)	. .

■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령	17494 (2002. 1.26)	
국군조직법제9조 제3항의규정에의한 전투를주임무로 하는각군의작전부대 등에관한규정	17494 (2002. 1.26)	
군인연금법시행령	17495 (2002. 1.26)	가
군인복제령	17542 (2002. 3.18)	
병무청과그소속 기관직제	17550 (2002. 3.25)	
통합방위법시행령	17557 (2002. 3.30)	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17571 (2002. 4. 8)	가
병역법시행령	17636 (2002. 6. 25)	16 가
국방부와그소속 기관직제	17638 (2002. 6. 25)	
병역법시행령	17718 (2002. 8. 21)	5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7718 (2002. 8. 21)	(02.8.21)
국방부여군발전단령	17758 (2002. 10. 14)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군기무사령부령	17762 (2002. 10.23)	가
국군수송사령부령	17787 (2002. 11. 29)	
군인및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 수당지급규정	17821 (2002. 12. 27)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7862 (2002. 12. 31)	가

■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534 (2002. 2. 1)	가 ,
병무청과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	535 (2002. 4. 1)	가
방위산업에관한 착수금및중도금 지급규정	536 (2002. 5. 14)	가
국방부와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	537 (2002. 6. 26)	,
군인사법시행규칙	538 (2002. 6. 27)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539 (2002. 6. 28)	,
군인등의특수근무 수당에관한규칙	540 (2002. 9. 5)	가 1 8 ,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시행규칙	541 (2002. 10.23)	(/) (43)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및 검찰서기의전형에 관한규칙	542 (2002. 11. 20)	가
국방부와그소속 기관직제시행규칙	543 (2002. 12..2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544 (2002. 12.31)	2002

■ 훈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획득관리규정	699 (2002. 1.10)	가 ,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	700 (2002. 2. 7)	, ,
국군기무사령부 사무분장규정	701 (2002. 3. 19)	
사고처리신상 필벌기준	702 (2002. 3. 19)	
선박통제규정 (공동훈령)	703 (2002. 4. 10)	• . •
국방정보통신기반 보호지침	704 (2002. 4. 1)	
재외공관주재군수 무관운영에관한규정	705 (2002. 4. 17)	(FMS) ,
법제업무처리규정	706 (2002. 5. 17)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회계관계공무원 등의지정과임명의 위임에관한규정	707 (2002. 5. 20)	가
국방교육훈련규정	708 (2002. 6. 19)	,
국방부위임전결 규정	709 (2002. 6. 24)	.
군사정보위원회 규정	710 (2002. 7. 24)	가 .
국방홍보지원반 운영규정	711 (2002. 8. 8)	
군사보안적부심사 규정	712 (2002. 8. 10)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선발및 관리규정	713 (2002. 8. 14)	가
전시보충소요기준 표준화규정	714 (2002. 9. 9)	가
국방정보본부사무 분장및운영규정	715 (2002. 9. 25)	
국방부회의운영 규정	716 (2002. 10. 19)	
국방정책연구관리 규정	717 (2002. 10. 28)	
합참부대훈련규정	718 (2002. 11. 29)	(02.6.19) / (99.2.2.7) (02.11.2)
선박통제규정 (공동훈령)	720 (2002. 12. 3)	.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가중요시설지정 및관리지침	721 (2002. 12. 3)	가
국방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722 (2002. 12. 24)	, ,
국군기무사령부 사무분장및운영 규정	723 (2002. 12. 26)	가
군기상정보지원 규정	724 (2002. 12. 30)	

2003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	증 감	%
합 계	16 3,640	17 4,264	1 624	6.5
전 력 투 자 비	5 4,756	5 7,328	2,572	4.7
경 상 운 영 비	10 8,884	11 6,936	8,052	7.4
○인 건 비	7 104	7 5,787	5,683	8.1
○사 업 비	3 8,780	4 1,149	2,369	6.1
• 급 식	1 173	1 257	84	0.8
• 피 복	2,338	2,448	110	4.7
• 부대활동지원	4,257	4,579	322	7.1
• 교 육 훈 련	1,478	1,584	106	7.2
• 장 비 운 영	4,332	4,703	371	8.6
• 물 자 획 득	728	820	92	12.6
• 시 설 건 설	3,942	4,405	463	11.7
• 시 설 유 지	2,406	2,660	254	10.6
• 예 비 전 력	626	684	58	9.3
• 연구/보조기관	1,325	1,390	65	4.9
• 주 둔 군 지원	2,832	3,172	340	12.0
• 기 본 사 업 비	4,158	4,280	122	2.9
• 책임운영기관	167	167	-	-

부록 27

연차별 정부재정과 국방비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경 상 GDP	482 7,442	521 9,592	545 133	588 6,144	638 6,466
○정 부 재 정 (증가율)	83 6,852 (10.7)	88 7,363 (6.0)	99 1,801 (11.8)	109 6,298 (10.5)	111 4,831 (1.7)
○국 방 비 (증가율)	13 7,490 (0.4)	14 4,774 (5.3)	15 3,884 (6.3)	16 3,640 (6.3)	17 4,264 (6.5)
• 전력투자비 (증가율) (구성비)	5 2,304 (2.8) (38.0)	5 3,437 (2.2) (36.9)	5 2,141 (2.4) (33.9)	5 4,756 (5.0) (33.5)	5 7,328 (4.7) (32.9)
• 경상운영비 (증가율) (구성비)	8 5,186 (2.2) (62.0)	9 1,337 (7.2) (63.1)	10 1,743 (11.4) (66.1)	10 8,884 (7.0) (66.5)	11 6,936 (7.4) (67.1)
-인 건 비 (증가율) (구성비)	5 201 (4.5) (36.5)	5 5,512 (10.6) (38.3)	6 4,822 (16.8) (42.1)	7 104 (8.1) (42.8)	7 5,787 (8.1) (43.5)
-사 업 비 (증가율) (구성비)	3 4,985 (1.3) (25.5)	3 5,825 (2.4) (24.8)	3 6,921 (3.1) (24.0)	3 8,780 (5.0) (23.7)	4 1,149 (6.1) (23.6)
○국방비 비율					
• 대 GDP(%)	3.1	2.8	2.8	2.8	2.7
• 대 재정(%)	16.4	16.3	15.5	14.9	15.6

* 정부재정 : 일반회계 기준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국방비		경상운영비			전력투자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1982	3 1,207	15.7	1 9,392	18.2	62.1	1 1,815	11.8	37.9
1983	3 2,741	4.9	2 525	5.8	62.7	1 2,216	3.4	37.3
1984	3 3,061	1.0	2 122	2.0	60.9	1 2,939	5.9	39.1
1985	3 6,892	11.6	2 1,845	8.6	59.2	1 5,047	16.3	40.8
1986	4 1,580	12.7	2 3,842	9.1	57.3	1 7,738	17.9	42.7
1987	4 7,454	14.1	2 6,001	9.1	54.8	2 1,453	20.9	45.2
1988	5 5,202	16.3	3 550	17.5	55.3	2 4,652	14.9	44.7
1989	6 148	9.0	3 4,155	11.8	56.8	2 5,993	5.4	43.2
1990	6 6,378	10.4	3 8,515	12.8	58.0	2 7,863	7.2	42.0
1991	7 4,764	12.6	4 4,988	16.8	60.2	2 9,776	6.9	39.8
1992	8 4,100	12.5	5 1,968	15.5	61.8	3 2,132	7.9	38.2
1993	9 2,154	9.6	5 7,981	11.6	62.9	3 4,173	6.4	37.1
1994	10 753	9.3	6 4,637	11.5	64.2	3 6,116	5.7	35.8
1995	11 744	9.9	7 1,032	9.9	64.1	3 9,712	10.0	35.9
1996	12 2,434	10.6	7 9,772	12.3	65.2	4 2,662	7.4	34.8
1997	13 7,865	12.6	8 9,032	11.6	64.6	4 8,833	14.5	35.4
1998	13 8,000	0.1	8 7,098	2.2	63.1	5 902	4.2	36.9
1999	13 7,490	0.4	8 5,186	2.2	62.0	5 2,304	2.8	38.0
2000	14 4,774	5.3	9 1,337	7.2	63.1	5 3,437	2.2	36.9
2001	15 3,884	6.3	10 1,743	11.4	66.1	5 2,141	2.4	33.9
2002	16 3,640	6.3	10 8,884	7.0	66.5	5 4,756	5.0	33.5
2003	17 4,264	6.5	11 6,936	7.4	67.1	5 7,328	4.7	32.9

부록 29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2001년 기준

국 가	GDP (\$억)	국방비 (\$억)	GDP 대 국방비(%)	병 력 (천명)	국민1인당 국방비(\$)
한 국	4,222	119	2.8	690	252
미 국	102,000	3,224	3.2	1,368	1,128
일 본	41,000	395	1.0	240	310
중 국	12,000	460	4.0	2,310	36
러 시 아	15,220	637	4.3	977	440
대 만	2,900	104	3.7	370	472
영 국	14,000	347	2.5	211	583
프 랑 스	13,000	329	2.6	274	553
독 일	18,000	269	1.5	308	328
이 스 라 엘	1,100	104	9.5	164	1,673
이 집 트	938	43	4.7	443	62
사 우 디	1,760	243	14.1	201	1,156
호 주	3,580	68	1.9	51	350
터 키	1,480	72	5.0	515	107
말 레 이 시 아	870	32	3.8	101	144
태 국	1,120	18	1.7	306	29
싱 가 포 르	850	43	5.1	61	1,044

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단, 한국은 정부통계 기준)

부록 30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 위원회 기능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소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 2000.7~2003년도 상반기 위원회 활동(국방부 소관)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13회 임시국회 (2000.7.5~7.25)	2000. 7. 6 7. 7	· 1 가
	2000. 7.10	· 가 ()
	2000. 7.21	· 가 ·
제215회 정기국회 (2000.9.1~12.9)	2000.10.11	· 2000 () ·
	2000.10.16	· 1999
	2000.10.19 11.7	· (, 27
	2000.11.27	· K1A1/K9 · · 2001
	2000.11.28	· 2001
	2000.11.29	· 2001
	2000.12. 4	· 8 ·
	2000.12. 5	· 2000 · 7 · ·
2000.12. 6	·	
제216회 임시국회 (2000.12.11 ~ 2001.1.9)	2000.12.20	·
	2000.12.21	· ,
제218회 임시국회 (2001.2.9~2.28)	2001. 2.20	· 1980 3 ()
	2001. 2.23	·
	2001. 2.27	· ('01.2.20 3)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20회 임시국회 (2001.4.2~4.30)	2001. 4.13	· ()
	2001. 4.18	·
	2001. 4.25	· (6.25 ,)
제221회 임시국회 (2001.5.2~5.31)	2001. 5. 2	·
제222회 임시국회 (2001.6.1~6.30)	2001. 6. 4	· ()
	2001. 6. 7	· (NLL)
	2001. 6.14	· () ·
	2001. 6.25	· ()
	2001. 6.27	· ('02 '06)
제223회 임시국회 (2001.7.6~8.4)	2001. 7.13	· () · ·
제224회 임시국회 (2001.8.6~8.31)	2001. 8.22	· (B-1)
	2001. 8.31	· 2001 · 2001
제225회 정기국회 (2001.9.1~12.9)	2001. 9. 5	· 2000
	2001. 9.10 9.29	· (, , 26)
	2001. 9.10	· 2000
	2001. 9.12	· (9.11)
	2001.10. 5	· (DMZ)
	2001.11. 5	· 2002 · ('02)
	2001.11. 6	· 2002 ()
	2001.11.7/11.9/11.12	· ()
	2001.11.12	· 2002 ·
	2001.11.27	· (14 , 7)
	2001.11.30	· · 2001 · · · (SCM , DMZ)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26회 임시국회 (2001.12.14 ~ 2002.1.12)	2001.12.26	· (/ ,) , ,)	
제227회 임시국회 (2002.2.1 ~2.28)	2002. 2. 8	·	
제228회 임시국회 (2002.3.4. ~4.2)	2002. 3. 4	· (KF-16) ·	
	2002. 4. 2	· (F-X)	
제229회 임시국회 (2002.4.3 ~5.2)	2002. 4.23	· F-X · · · () ·	
제231회 임시국회 (폐회중)	2002. 6.29	· NLL	
제232회 임시국회 (2002.7.8 ~8.3)	2002. 7.26	· / · , , 16	
제233회 임시국회 (2002.8.5 ~8.31)	2002. 8.21	· '02	
	2002. 8.26	· (,)	
제234회 정기국회 (2002.9.2 ~12.10)	2002. 9. 5	· '02 · '02	
	2002. 9.11	· () - () - () - ()	
		2002. 9.12	· 2001 ,
		2002.9.16 10.4	· (, 24)
	2002.10. 8	·	
	2002.10.14	·	
	2002.10.15	· ()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34회 정기국회 (2002.9.2 ~12.10)	2002.10.18	· ()	
	2002.10.21	· 2003 , ()	
	2002.10.22	· 2003 (, 가)	
	2002.10.23	· · 2003 , , · , - () - () - () - () - () - () - ()	
	2002.10.29	· ·	
	2002.10.30	· () · - () - () - - - F-15K - 2002 - () - () - () - () - ()	
	2002.11. 5	·	
	2002.12. 3	·	
	제234회 정기국회 (폐회중)	2002.12.28	· (,)
	제235회 임시국회 (2002.12.30 ~2003.1.28)	2003. 1.16	· () · ·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36회 임시국회 (2003.2.5. ~2.28)	2003.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02 '03)
제236회 임시국회 (폐회중)	2003.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03.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238회 임시국회 (2003.4.1. ~4.30)	2003.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부록 31

국방 주요 연표(2000년~현재)

구 분	일 자	주 요 사 업
2000	1. 1	(: 16634 , 16674)
	1. 6	
	1.12	
	1.20	.
	3.18	.
	3.23	, 5
	5.16	.
	5.22	.
	6.13	/ (6.13 6.15)
	00.6. ~ 03.7.27	6.25 50 (6 ~ 03.7.27)
	8.28	(: 16958)
	9. 1	
	9. 5	
	9.18	‘ ’
	9.21	32 . (SCM)
	9.25	(9.25~26,)
	10. 2	3
	11. 2	(KSS-II)
11. 3	KT-1	
2001	1.12	. ‘ ’
	1.16	. ()
	1.18	. SOFA
	1.30	
	3.26	36 ()
	5. 8	. (CIO)
	6.21	.
	8. 1	

구 분	일 자	주 요 사 업
2001	8.20~31	
	10. 5	15 /20
	10.13	K1A1
	10.1~10.15	2001
	10.31	T-50 1
	11. 2	
	11.14	23 韓·美 (MCM)
	11.15	33 . (SCM)
	12. 1	‘ ’ ()
	12.13	韓·中
	12.18	對 (924 , ,)
	12.19	韓·
	12.31	(: 17472)
2002	1.26	(174)
	2.20	.
	2.27	‘ ’
	3.29	.
	4.18	6 1
	4.19	F-15K
	4.20	.
	5. 8	
	5. 9	
	5.22	‘ ’
	5.28	‘ ’ (F-X)
		‘ 16 ’
	6.27	
	6.29	‘ ’ ()
7.11	37 (李俊)	
7.24	KDX-	

구 분	일 자	주 요 사 업
2002	7.25	17 . (MC)
	8. 6	- ,
	8.20	T-50
	9. 5	韓·濠
	9.17	‘ DMZ ’
	9.18	.
	9.26	.
	10. 5	17
	10.18	7
	11. 1	‘ ’
	12. 5	24 . (MCM)
	12. 6	34 . (SCM)
	12.21	.
2003	1.16	가 가
	2. 6	美 ‘ ’
	2.27	38 ()
	3.19	韓·美 (RSOI)
	3.29	.
	4. 2	‘ ’
	4. 8~9	韓·美
	4.10	.
	4.11	2 (KDX-)/2 ‘ ’
	4.15	‘ ’
	4.17	() 1 / ‘ ’
	4.30	() 1
	5.15	韓·美 , .
	5.17	
	5.19	‘ ’
	6.24	(2)
	6.25	()
6.27	. ()	

11-1290000-000246-01

2003 7 15
2003 7 15

: ()

:
:
: ()

(02)2273-8111

: www.mnd.go.kr
: (02)748-6227